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0 ~ 2024)

국 방 부

국방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0. 5.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 (02-748-65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기획총괄담당관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 1

1. 그간의 정책성과 ····· 1

2. 향후 정책 추진방향 ····· 6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 11

1. 국방부 일반현황 ····· 11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 14

Ⅲ. 세부 추진계획 ····· 19

전략목표 Ⅰ ····· 19

전략목표 Ⅱ ····· 63

전략목표 Ⅲ ····· 83

전략목표 Ⅳ ····· 105

전략목표 Ⅴ ····· 143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및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

○ '9·19 군사합의'('18. 9월)를 통해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 토대 마련

- **(상호 적대행위 중지)** '18. 11. 1일부로 시행된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조치 지속 이행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 **(서해 NLL일대 평화수역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우발적인 군사 충돌 방지 및 어로활동 보장
- **(교류협력 보장)** 남북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및 시행

○ 북한 핵·WMD 위협 대응 중심의 기존 '한국형 3축체계'를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핵·WMD 위협에 대비하는 '핵·WMD 대응체계' 개념으로 보완·발전

- 다양한 핵·WMD 위협 대응 및 우리 軍 주도의 연합·합동 작전 능력 보강 등 핵심군사능력 구비를 위한 전력 확보

  * '19년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핵심전력 도입

○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19. 9월) 수립하여 국가 사이버안보의 비전과 목표 설정 및 방향성 제시

○ 테러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테러 정책 및 대테러 작전부대 장비·물자 보강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 긴밀한 한미공조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 노력 지원

- 연합연습·훈련 조정 시행 방안 공조를 통해 외교적 노력 지원 및 전작권 전환 여건 보장

- 핵심 동맹현안 성공적 관리를 통해 연합방위력 제고

  * △ 연합사 이전, △ 방위비 집행 및 협상 지원, △ 미군기지 반환 등

- 미래 한미 국방협력 및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발전방향 정립

  * 韓美 국방부 주도,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연구결과 완성

- 경색된 한일관계 불구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모멘텀 지속

○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 가중 등 안보환경 변화 고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

  *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안보 상황에 맞춰 양국이 합의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작권 전환

- '18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공동 노력 경주에 공감, '연합방위지침' 합의

- '19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사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결과 검토, '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시행 합의

○ 해외 파병부대 무사고 완전작전 임무 수행과 다자간 협의체 적극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 기여 확대 및 국가위상 제고

□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혁신강군 건설

○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상황 및 국방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작성 완료('19. 1월)

○ 강력한 국방개혁 추진으로 강한 군대 조기 구현 노력 강화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기술집약형 구조로 개편
-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간부 및 민간인력 증원, 현행작전 부대의 완전성 제고, 예비전력 정예화 등 전투역량은 강화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기반 구축

-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18. 4월)을 통한 동원자원 집행·관리 일원화 및 신속하고 체계적인 작전 수행여건 보장
- 대대급단위 노후된 예비군훈련장을 여단급단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

  * '17년(37사단 충주·옥천·괴산), '18년(36사단 만종), '19년(51사단 안산 등 9개소)

-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의 확대 운영('14 ~ '19년 총 2,125명)

□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 '20년 국방예산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2조원 확보

○ '19년 중앙부처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등, 중소기업이 군수품 조달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과거 예비역 장성이 보임하던 국방부 실장급 5개 직위 중 4개 직위를 민간출신 공무원으로 대체

○ ICT기술 기반으로 스마트하고 강한 군대를 건설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국방 혁신방안 수립

○ 국방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

- 매년 국제방산전시회 참가, 서울 ADEX 개최 등 국제방산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방위사업법」으로부터 방위산업 발전 부분을 분리하여 새로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년)
  * 전향적 규제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 등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을 통해 국방연구개발사업의 혁신적 수행체계 구축
  *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협약 도입, 국방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및 미래 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 근거 마련 등

○ 여군 간부 지속 확대 ('19년 말 6.8%), 주요 직위에 여군 보직 추진, 우수 여군의 상위계급 진출률을 향상하여 군내 여성 대표성 제고

* 항공병과 최초 여군 소장 및 정보병과 최초 여군 준장 진출, '16년 대비 중·대령 진급 선발 300% 증가 ('16년 22명 → '19년 68명)

○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시설(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현장 중심 성폭력 예방활동 및 성인지교육 강화, 여성 필수시설 확충

○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마련, 대체역 신설 등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병 입대일 조기확정, 병 진급최저복무기간 단축 등 입영 과정과 군 복무의 편익 증진을 위한 복무체계 개선

○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군 부대 활용가치 향상, 전문기관을 통한 위탁개발 추진,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등을 통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민편익 증진 도모

○ 군사시설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한 지역 완화, 무단점유 사·공유지 발굴 및 정상화를 통한 국민 재산권 보장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內 포용문화 정착

○ 병 봉급 연차적 인상, 급식·피복 개선 등 장병 생활여건 질적 개선

- '20년 병 봉급을 '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인상

  * 상병 기준, '17년 195,000원 → '20년 488,183원

- 장병 급식·피복 질적 개선

  * 급식비 매년 단계적 인상('16년 2%인상, '17년 2%, '18년 5%, '19년 2%)

  * 민간조리원 확충('16년 +46명, '17년 +74명, '18년 +62명, '19년 +79명)

- 군인연금과 재해보상 제도를 분리하여 제도적 기반 강화

  * 순직유족연금 인상 등 재해보상 현실화를 위한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 분할연금제도 도입 등 「군인연금법」 전부개정을 통해 미비점 보완

- 진로교육 및 상담 등 청년장병 지원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 취업인원 : ('18년 시범사업) 457명 → ('19년) 4,218명

- 외래환자 후송버스 도입, 불필요한 진료단계 단축,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실시

- 직업군인 주거지원 세부계획을 수립 및 맞춤형 주거지원 제공

○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및 생산적 복무여건 확대

- 병 휴대전화 사용 등을 통한 만족도 증가 및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강화 활동 등을 통한 인권보장 의식 향상

-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 영장 없는 구금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군기교육제도 등을 도입하는 '군인사법' 개정

- 군내 범죄피해자 및 사망장병 유족에게 민간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제도 최초 시행

  * '19년 지원결과 : 사망장병 유족 39건 지원, 군범죄 피해자 13건 지원

○ 국방개혁2.0에 대한 홍보를 통해 튼튼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한 우리 군의 향후 발전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 제고

- 온라인 중심의 홍보콘텐츠 제작 및 SNS 채널을 통한 정책홍보 정착

2. 향후 정책추진 방향

□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및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

○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안정적 군사상황 관리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향상으로 다양한 위협 대비 작전대비태세 완비

○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군사 분야 지원을 통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토대 마련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를 통한 안정적 안보환경을 구축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 각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기반 조성

○ 남북 교류협력 발전 및 북미비핵화 협상 진전에 대비하여 북한 비핵화 로드맵 구체화 시 지원 등 국방분야 비핵화 정책 발전 추진

○ 국방 사이버조직 임무수행체계 발전
- 국방 사이버안보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조직별 임무 정립 및 합참 중심의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구축
-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지닌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까지 사이버보안 대상을 확대하고, 사이버자산의 수명주기 全 단계별 사이버보안 수준 강화

○ 선진화된 국방재난·안전체계 구축
- 군 내 재난을 대비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 내 노후, 재난취약지역(시설) 예방공사 실시
- 국가적 재난발생 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대민지원 활동 추진
- 해외재난 발생 시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군(軍) 수송기 및 긴급구호물품 등 인도적 지원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 정책 공조 지속

- 美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관련 한미 국방부 고위급 간 정례 및 수시 협의 확대

  * 한·미 장관회담, SCM, KIDD, DTT 등 고위급 정례·수시 협의 활성화

-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연습·훈련 시행으로 대내·외 굳건한 한미동맹 현시

○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하에서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

○ 한국군 주도의 새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군 능력 확보

○ '21년까지 대부분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추진 및 반환기지 환경정화 및 매각 추진

○ 양자·다자회의 확대 등을 통해 국방교류협력의 내실화 추진 및 적극적인 국제평화 유지 활동으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혁신강군 건설

○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조기 구현

-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방위역량 확충

  * 전작권 전환 핵심군사능력 확보

  * 미래전쟁 양상 고려, 육·해·공군 균형 발전으로 합동성 극대화

  * 전방위 위협 대응 및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첨단전력 증강

-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에 따른 신분별·계급별 정원 설계

- '22년까지 여군 인력(장교, 부사관)을 8.8%까지 확대

○ 국방개혁과 연계한 부대개편시설사업 적기 추진

○ 국방개혁2.0과 연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 국방환경변화를 고려한 적정규모 예비군 편성 추진 (~ '22년)
-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 추진 (~ '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

  * 동원훈련 보상비 : '18년 (1.6만원) ⇨ '19년 (3.2만원) ⇨ '20년 (4.2만원) ⇨ '22년 (9.1만원)

- 해군 예비전력관리 전대 창설 (~ '23년)
- 여단급단위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 (~ '24년)
-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 후 시험적용 및 전면시행 (~ '24년)

□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 적정 국방예산의 확보와 효율적 운용

- 국정과제 이행 및 국방개혁 2.0 추진을 위해 적정수요를 반영한 국방예산 확보 ('20년 증가율 7.4%)
- 국방경영 혁신 및 국방예산 이월·불용 최소화를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노력 병행 추진

○ 연간 구매액(물품·공사·용역)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고, 성능이 우수한 기술개발 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판로지원 및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

○ 효율적인 군 인력운영 및 병 복무체계 개선

- 간부 정년연장, 부사관 계급 다단계화, 여군 확대 등 간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우수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력운영 개선
- 대체역 시행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추진을 통해 병역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병역이행자의 권익과 인권을 강화하며,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 안정적인 병력 확보와 수급대책을 마련

○ 국방 문민화 적극 추진으로 실질적 문민통제 구현

- 문민화 대상 과장 직위에 순수 민간공무원 단계적 전환 시행(~'22년)

○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정보화 혁신」 추진의 성과를 창출하고, 상용 신기술 실증 및 국방적용 촉진을 위한 국방실험사업 추진

* '20년 국방실험사업(7개 사업) 추진 및 '21년 신규사업 소요 발굴

○ 방산비리 척결 및 방위산업 육성

- (투명성)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화
- (효율성) 방위사업 업무체계 효율화 등 국방획득체계 개선
- (경쟁력)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및 방산수출 기반 확대

○ 군 공항 이전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운영 및 관리

- 지자체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의 부지선정 절차 추진
- 해강안 경계철책 및 대전차 방어시설(낙석) 철거,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위탁개발 시행, 미활용 군용지 환경오염 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도모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를 발굴하여 정상화(매입, 교환, 유상임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장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內 포용문화 정착

○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국가책임 이행 강화

- 병 봉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식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보상

* 병장 기준 : ('18년) 40.5만원 → ('20년) 54만원 → ('22년) 67.6만원

- 피복, 장구류 및 급식 개선을 통한 전투력 발휘 여건 보장

- 환자 중심의 군 의료기관 진료여건 개선 등 의료지원체계 개선
  * 군 복무 중 질병 · 부상을 입은 병사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여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 최대 활용 및 진료비 지원 확대
-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발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 민간주택시장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주거시설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 등
- 제대군인의 일자리 확보 및 취업지원 강화
  * 단·중·장기복무자별 복무특성에 따른 수요자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개인별 진로목표 기반 일자리 연결 지원
- 수혜자 중심의 군인연금사업 운영
  *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강화하고 수혜자 편익 증진
  * 군인연금제도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여 정부 부담을 최소화

○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및 생산적 복무여건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 인권보호관' 신설 추진
- 군내 범죄피해자 및 사망 장병 유족에게 민간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 사고예방 활동 및 복무부적응 장병 관리체계를 강화를 통한 군내 인명사고 감소화
- 고충을 겪고 있는 장병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그린캠프) 개선을 통해 입소자의 자대 복귀율 향상 제고
- 군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및 장병 자기개발 학습 기회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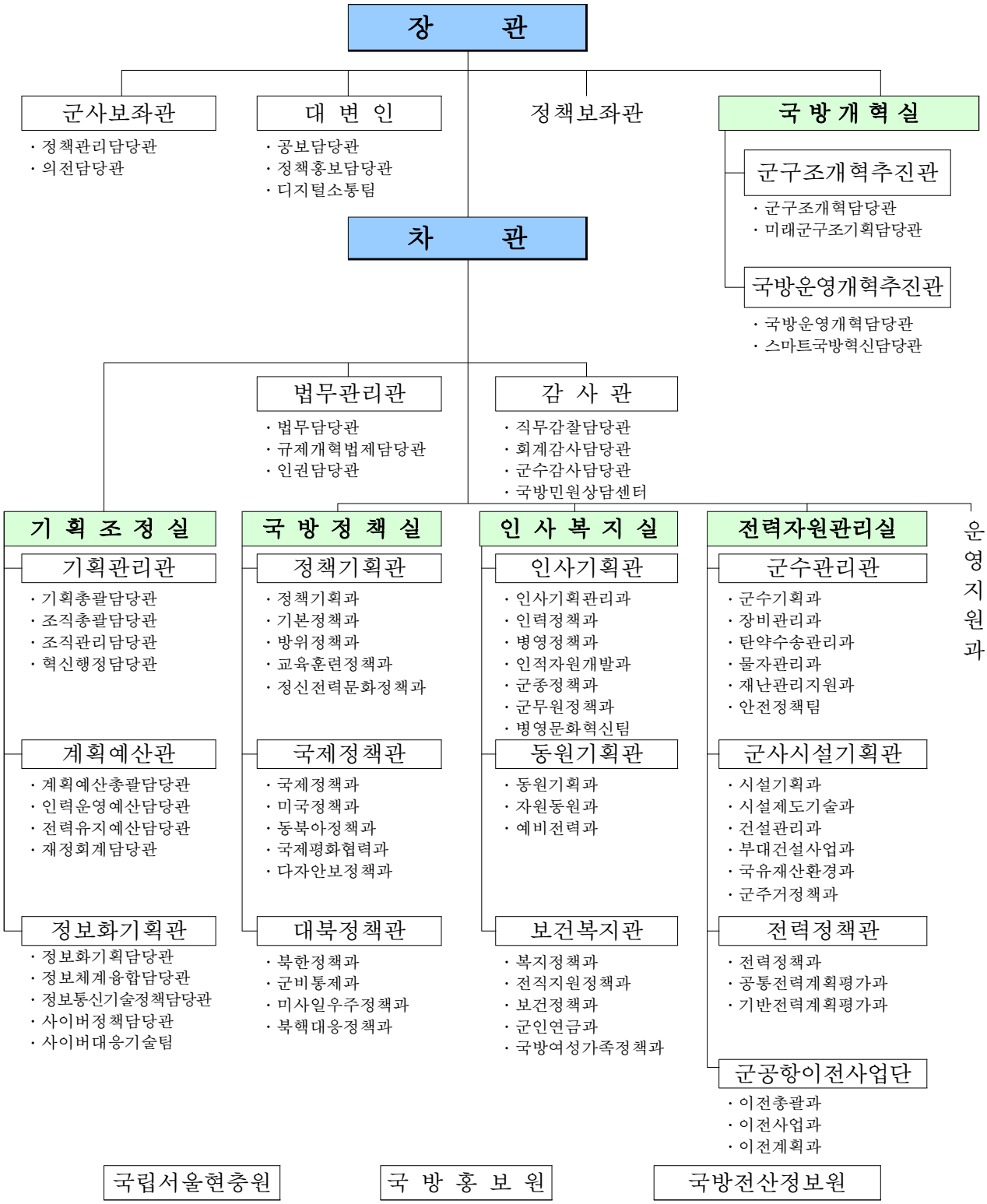
○ 군에 대한 신뢰 및 지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 의료 혁신 및 스마트 국방 등 국방개혁의 주요 정책에 대한 체계적 홍보 진행
-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 재난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의 모습을 홍보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국방부 일반현황

(1) 조직 (5실 19관 77과·팀 3소속기관)

* '20. 5. 25. 기준



(2) 인원 (국방부본부 및 소속기관)

* '20. 5. 25. 기준

구분	총계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관리운영직	전문경력관	특정직
				고위공무원	3급	4급	5급	6급이하			
국방부 본부	981	2	6	17	11	80	224	287	44	8	302
소속 기관	310	0	0	3	1	11	22	159	30	38	46
계	1,291	2	6	20	12	91	246	446	74	46	348

※ 시간선택계약제는 0.5명으로 계산 (국방부 본부 8명, 소속기관 4명)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	'20	'21	'22	'23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326,524	352,478	379,328	403,048	419,265
(전년대비증가율, %)		7.9	7.6	6.3	4.0
ㅇ 총계	369,723	394,861	419,555	448,222	465,939
(전년대비증가율, %)		6.8	6.3	6.8	4.0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35,818	145,906	156,916	164,764	170,825
(전년대비증가율, %)		7.4	7.5	5.0	3.7
ㅇ 기본경비	3,939	4,108	4,545	4,768	4,964
(전년대비증가율, %)		4.3	10.6	4.9	4.1
ㅇ 주요사업비	186,767	202,464	217,867	233,516	243,476
(전년대비증가율, %)		8.4	7.6	7.2	4.3
□ 예산					
ㅇ (총)지출	287,089	311,396	336,418	358,131	372,383
(전년대비증가율, %)		8.5	8.0	6.5	4.0
ㅇ 총계	322,121	351,072	374,755	401,279	416,505
(전년대비증가율, %)		9.0	6.7	7.1	3.8

구 분	'19	'20	'21	'22	'23
【일반회계】					
ㅇ (총)지출	279,450	304,510	326,569	348,430	363,753
(전년대비증가율, %)		9.0	7.2	6.7	4.4
ㅇ 총계	308,856	334,809	358,619	381,972	398,885
(전년대비증가율, %)		8.4	7.1	6.5	4.4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ㅇ (총)지출	3,321	3,338	2,477	1,126	583
(전년대비증가율, %)		0.5	△25.8	△54.5	△48.2
ㅇ 총계	4,970	6,997	7,750	7,712	8,349
(전년대비증가율, %)		40.8	10.8	△0.5	8.3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ㅇ (총)지출	4,318	3,548	7,372	8,575	8,047
(전년대비증가율, %)		△17.8	107.8	16.3	△6.2
ㅇ 총계	8,295	9,266	8,386	11,595	9,271
(전년대비증가율, %)		11.7	△9.5	38.3	△20.0
□ 기금					
ㅇ (총)지출	39,435	41,082	42,910	44,917	46,882
(전년대비증가율, %)		4.2	4.4	4.7	4.4
ㅇ 총계	47,602	43,789	44,800	46,943	49,434
(전년대비증가율, %)		△8.0	2.3	4.8	5.3
【군인복지기금】					
ㅇ (총)지출	5,789	6,421	6,265	6,719	7,087
(전년대비증가율, %)		10.9	△2.4	7.2	5.5
ㅇ 총계	13,107	8,484	7,513	8,103	8,996
(전년대비증가율, %)		△35.3	△11.4	7.9	11.0
【군인연금기금】					
ㅇ (총)지출	33,646	34,661	36,645	38,198	39,795
(전년대비증가율, %)		3.0	5.7	4.2	4.2
ㅇ 총계	34,495	35,305	37,287	38,840	40,438
(전년대비증가율, %)		2.3	5.6	4.2	4.1

2. 성과관리 전략계획 개요

(1) 전략계획의 주요 특성

□ **정부의 국정운영체계**에 입각하여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이라는 **국방전략 기조**하에 대통령의 통수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운영의 5대 중점'을 전략목표로 설정**

* 전략목표 : 국방태세, 한미동맹, 국방개혁, 국방운영, 복지·인권

○ 5대 전략목표 하에 **정부「국방분야 5대 국정과제」를 적극 반영**하여 분야별 핵심 추진방향을 **성과목표로 도출**

○ 정부 국정기조에 따른「100대 국정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직·간접적 연관과제를 도출**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성과목표 및 실천과제 발굴**

□ **내·외부 국방환경·여건 분석 및 전망**을 통해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추진과제 선정**

* 국방기본정책서, 국방발전과제(안), 중장기·현안 연구 및 국방정책 기조 등을 기반으로 핵심과제 선정

○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별 상황평가, 추진목표 및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성과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구체화**

○ 성과목표별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는 중점 관리하고, 리스크 및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 운영

○ 이해관계자·부처와의 갈등요인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 도출

※ 국방환경 평가·전망

세계 정세	○ 주요국의 힘을 통한 외교 및 **'자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으로 **기존 협력관계 약화 및 세계안보의 불확실성 증대** 전망 ○ 주요 국가간 대립 심화로 **국제 경제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안정적인 해상교통로 확보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 ○ 테러·사이버공격, 신종 감염병,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 도전요인 증대, 4차 산업혁명으로 **전쟁의 패러다임 변화** 전망
동북아 정세	○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 下 **對中견제 본격화 및 역내 안보협력 강화** ○ (중국) 미국과 **영향력 확대 경쟁** 下 군사·외교 활동 강화 ○ (일본) **개헌 추진, 자위대 임무·역할 강화**, 미일동맹 강화 ○ (러시아) 대미관계 개선, **북한과의 경협 활성화** 추진
북한 정세	○ **'9·19 군사합의' 이행**을 기초로 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의 토대 마련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감소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 공조활동 강화** 필요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南北·美北 대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나 **최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등 南北·美北간 대화가 정체**된 측면
대내 여건	○ (병역자원) 병 복무기간 단축 및 병역의무자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 ○ (국방예산) 저성장 대응에 중점을 둔 정부 정책으로 정부재정 내 **국방예산 비중 지속적 하락,** 핵·WMD 위협 대비 전력 증강 등 **국방예산 소요 지속 증가**
국민의 요구	○ (대비태세) **안보 우려 심화** 및 북한 도발시 **단호한 대응 요구** ○ (한미동맹) 국가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의 지속 강화 필요** ○ (기 타) 병역비리 척결, 인권 보장 및 기강이 확립된 **병영문화 개선 요구**

국방운영 5대 중점	●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및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 ●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혁신강군 건설 ●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內 포용문화 정착

(2) 전략계획의 목표체계

□ 목표체계 수립 배경

○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체계에 입각하여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이라는 국정과제 국방분야 전략과 연계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정목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전략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남북간 화해협력과 핵 없는 한반도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국방부 국정과제	1 북핵 등 비대칭위협 대응능력 강화 2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3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4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5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 국방부 기본임무에 입각하여 대통령의 안보·국방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국방 비전 설정

임 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
  - 북한 핵·미사일, 대량살상무기 등을 이용한 각종 도발 억제
  -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방태세 확립
- **평화통일을 뒷받침**
  - 한반도 전쟁 억제 및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비통제를 통해 평화통일 과정에 적극 기여
-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
  -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군사적 우호협력관계 증진
  -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 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

비 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 **유능한 안보**
  - 독자적인 능력·태세를 구비하여 적 도발에 대해 행동으로 대응하고, 對 주변국 관계에서 '힘'으로 국익 수호
- **튼튼한 국방**
  -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토대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국방 비전 구현을 위한 국방운영 목표 및 중점 도출

국방운영 목 표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 **혁신하는 국방**
  - 장병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싸우는 방법에 기초한 국방개혁**을 통해 새로운 강군 건설
-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에게 **헌신 및 봉사**하는 군 육성

국방운영 5대 중점

1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및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적의 도발을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

2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방위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임기 내 전환**하고,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포괄적인 관계**로 발전, 국방교류협력 강화 및 해외파병 성과 확대 ·발전

3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혁신강군 건설

싸우는 방법 중심으로 정예화된 국군을 건설하고, 한국군 주도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여 **책임국방** 구현

4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방산비리 척결, **국방예산의 합리적 배분·사용** 및 효율적인 자원 관리·운용 등을 통해 혁신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5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內 포용문화 정착

획기적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선진 병영문화 창출**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는 군대 육성

□ 목표체계도

임 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비 전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전략목표 Ⅰ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및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
성과목표 Ⅰ-1	전방위 군사대비태세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우리 군 핵심 역량강화
성과목표 Ⅰ-2	전쟁 지속능력 강화
성과목표 Ⅰ-3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성과목표 Ⅰ-4	다양한 핵 · 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전략목표 Ⅱ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성과목표 Ⅱ-1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 조기전환
성과목표 Ⅱ-2	국제적 안보 · 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교류 · 협력의 전략적 강화 · 발전

전략목표 Ⅲ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혁신강군 건설
성과목표 Ⅲ-1	국방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군구조 개편 /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성과목표 Ⅲ-2	예비전력 정예화

전략목표 Ⅳ	공정 ·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성과목표 Ⅳ-1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 · 운영
성과목표 Ⅳ-2	안보환경변화와 연계한 효과적인 국방인사정책
성과목표 Ⅳ-3	4차 산업혁명의 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달성
성과목표 Ⅳ-4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
성과목표 Ⅳ-5	군 공항 이전 및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운영 및 관리

전략목표 Ⅴ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內 포용문화 정착
성과목표 Ⅴ-1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국가책임 이행강화
성과목표 Ⅴ-2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및 생산적 복무여건 확대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및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

기 본 방 향

◇ 국방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부 대북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며 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전략적 소통과 홍보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확고한 국방태세 견인 및 책임국방 실현에 기여

○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하는 국방 비전·중장기 정책방향 정립, 연간 단위의 단기 국방정책 수립 및 국방현안 이슈에 대한 국민 소통 및 이해 제고 노력을 통해 군 전반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 확보

○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지원 및 남북교류사업의 군사적 지원·보장, 대북 군사현안 대응체계 유지를 통해 남북(군사)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 구현

◇ 전투장비 가동률 보장 및 탄약지원능력 향상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실전적훈련과 정신전력을 강화하여 전쟁지속능력을 강화

○ 안정적인 지원체계와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4차 산업혁명기술 적용 등 전투장비 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정비정책 추진으로 전·평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보장

○ 전시 부족탄약 확보의 실효성 향상과 저장시설 개선을 통한 생존성 보장 및 탄약 성능보장을 통하여 작전지속능력 향상

○ 전투임무 위주 교육훈련 강화 및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화 된 선진강군 육성

◇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 현실화·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북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

○ 해킹 등 증대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추진

○ 국방 대비태세 및 대응능력 강화, 적시적·효과적 위기관리를 통해 북한의 도발 시 단호한 대응과 안정적 위기관리 수행으로 안보 불안감 해소

◇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 '9·19 군사합의' 이행을 기초로 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토대 마련 및 정부 대북정책 수립의 군사분야 지원

○ 군비통제 정책 수립, 정책발전 방향 연구 등 군비통제 추진 토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국내외 협력 활동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에 기여

◇ 다양한 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

○ 다양한 핵·WMD 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및 우리 軍의 독자적 능력 발전과 정부의 비핵화 정책 지원

○ 北 핵·미사일 위협과 잠재적인 전방위 핵·WMD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국방우주 역량을 강화하여 국방태세 확립에 기여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를 통한 안정적 안보환경을 구축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 각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기반 조성

전략목표 1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및 한반도 평화정착 뒷받침

(1) 주요 내용

□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우리 군 핵심역량 강화

○ **중장기 국방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국방백서 발간, 전략적 소통(SC) 등의 국방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신뢰와 지지 확보

○ **NSC·국회·정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주요 국방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 군사상황관리·적극적인 테러 예방 및 전구급 연습** 등을 통해 전방위 대비태세 확립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및 사이버기술의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한 **국방사이버안보 정책 및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점 점검·분석 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

○ 군 내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난·안전 예방·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방 재난·안전 제도 및 정책발전의 선진화**를 도모함

□ 전투장비 가동률 보장 등을 통한 전쟁지속능력 강화

○ 안정적인 지원체계 및 과학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장비·정비정책 추진으로 **전투장비가동률 보장**

○ 전시 부족 탄약 확보에 대한 실효성 향상과 **탄약 저장시설 현대화** 및 지하화 등 **저장환경과 능력을 최적화**하여 작전 지속능력을 강화

○ 실전적으로 **부대훈련 방법과 학교교육체계를 개선**해 전시 작전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전투임무위주 교육훈련 강화 및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며,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통한 전투준비태세 강화

□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 '9·19 군사합의' 이행을 기초로 하여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의 토대 마련하고 정부 대북정책 수립에 대한 군사 분야 지원

○ **남북군사회담 개최**에 대비한 역량강화, 예상 의제 개발, 의제별 보충·대응논리 구상, 자체 워크숍 등 회담 즉응태세 유지

○ '9·19 군사합의' 이행 및 'DMZ 평화의 길' 추진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한 군비통제정책 추진여건 마련

○ 실질적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감소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 공조활동을 강화**하고, 국방부 중심의 **화생정책 발전** 기반 조성

□ 다양한 핵·WMD 위협을 억제·대응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힘으로 뒷받침

○ 다양한 핵·WMD 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및 우리 軍의 독자적 능력 발전과 **정부의 비핵화 정책 지원**

○ 北 핵·미사일 위협과 잠재적인 전방위 핵·WMD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국방우주 역량을 강화하여 국방태세 확립**에 기여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를 통한 안정적 안보환경을 구축하여 국가에 대한 신뢰를 증대시키고 각자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평화기반 조성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5">실적</th><th>목표치</th><th rowspan="2">'24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4</th></tr>
<tr><td>정부총지출 대비 국방예산 비율</td><td>10.0</td><td>10.1</td><td>10.1</td><td>9.9</td><td>9.8</td><td>10.0</td><td>• '19년에는 9.8% 달성
• 재정당국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20년 예산을 최대한 확장 편성*할 것으로 전망
• '20년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7.4% 증가
< 정부총지출 대비 국방예산 >
(단위 : 조원, %)
<table>
<tr><th>연도</th><th>총지출</th><th>예산</th><th>지표값</th></tr>
<tr><td>'20</td><td>512.3</td><td>50.2</td><td>9.79</td></tr>
<tr><td>'19</td><td>469.6</td><td>46.7</td><td>9.94</td></tr>
<tr><td>'18</td><td>428.8</td><td>43.2</td><td>10.07</td></tr>
<tr><td>'17</td><td>400.5</td><td>40.3</td><td>10.06</td></tr>
</table>
• 정부총지출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10%대를 유지하여 왔음
• 재정당국은 복지 및 고용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 중으로,
• 나머지 부처는 예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전 등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여론 및
• 확장재정 전망 등 현실적인 예산확보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근 5개년 실적치의 평균인 10.0%를 '24년 목표치로 설정</td><td>• (국방예산/정부총지출) × 100</td><td>• '21년 국방예산 확정액
•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 시스템</td></tr>
</table>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Ⅰ-1. 국방정책 국민 만족도	55%	57%	58%	59%	60%
Ⅰ-2. 전시 군수지원 능력 향상률(50%)	100%	100%	100%	100%	100%
장병 정신전력 지수(50%)	80.17점	81.16점	81.6점	81.8점	82.0점
Ⅰ-3.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군사분야 지원을 통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토대 마련	신규	신규	60%	61.5%	63%
Ⅰ-4. 다양한 핵·WMD 위협 억제·대응 발전(25%)	신규	신규	70%	71%	72%
미사일·미사일방어 역량 강화(25%)	66%	100%	100%	100%	100%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전력화율(50%)	신규	신규	40%	42%	44%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안보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국방정책방향 제시 필요**

○ 북한·주변국 군사위협 등 전통적 안보위협과 함께, **전염병·재난·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사이버위협** 기법·양상이 지능화·고도화·대규모화됨에 따라 **단일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 증대**

○ 적 도발시 장비 불가능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 발생 가능성과 전시 탄약지속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제한**

○ 기술집약형 軍으로의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개선과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 배양 요구**

○ '9·19 군사합의'체결 등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2019년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등 **남북 및 북미간 대화가 정체된 측면**

○ 북한은 핵실험을 6차례 실시하여 핵능력을 완성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최근까지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는 등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으며,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WMD 연구개발·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중·일·러 등 주변국**은 동북아지역 내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극초음속 무기, 우주 전력 확보 등을 추진 중**이며, 이는 향후 우리 안보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핵·WMD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軍의 대응능력 구축이 필수적임

《 대응 방안 》

○ 중장기 국방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한 국방정책 발전 추진을 통해 포괄적 안보체제 구축

○ 현 정부 대북정책 추진을 군사 정책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구축 프로세스 이행

○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 「국방백서」 등을 작성 및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합참, 각 군 등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완화

○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연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전시 탄약소요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예산획득의 합리적 근거와 예산 소요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확대 및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된 군비통제정책 발전 및 보다 진전된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국제군비통제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 반영 및 국가 이익에 우호적 여건 조성

○ 다양한 핵·WMD 위협에 대응정책과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美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추진

○ 정부 유관부처 및 국방부 유관부서의 협력체계 강화로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 수립을 국방분야에서 적극 지원 보장

○ 핵·WMD 대응체계 개념 발전, 4D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 및 국방 우주력 발전 추진

○ 해외 미사일·우주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주변국의 미사일·우주 정책 동향 파악 및 정책적 함의 도출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를 위해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및 확보 추진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초국가적 위협의 확산과 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위협으로 국방대비태세 확립 시 정책추진 방향의 한정된 자원 배분 문제 발생 가능성

○ 사이버 위협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없으므로 부처별 담당 영역을 명백히 구분하기 곤란하고 각 국의 이해관계 또한 상이하여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체계 구축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정책을 추진하고, 초국가적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국제적 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사이버 협력 강화를 추진

○ 장비가동률과 연계한 현실성 있는 분석 및 효율적 활용방안이 부족하고, 탄약고 관련 지자체 지역개발 및 주민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 빈도 증가

○ 남북관계진전 및 남북대화 추진은 국내 여론 뿐만 아니라 한·미 및 한·중 간 관계 등에 의해서도 갈등요소 쟁점화 가능

-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의 북한 이행 여부,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부·외교부 등 유관 부처와 조율된 가운데 추진해 나갈 필요

○ 북한의 핵·WMD 위협 고도화에 따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협상은 교착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북한의 핵·WMD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안보불안 확산 우려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 완료될 때까지, 현존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토대로 연합 억제·억제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우리의 독자적인 핵·WMD 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며, 정부의 비핵화 정책 수립 관련 적극적인 국방분야의 역할 및 지원 수행 필요

- 핵·WMD 대응 핵심전력 구축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전력 획득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의 적극적 협조 필요

《 대응 방안 》

○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 「국방백서」 등을 작성 및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합참, 각 군 등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완화

○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연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장비 운용제원, 환경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정 장비수명 판단 및 소요를 산출하고, 장비운영중 센서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효율적 예방정비와 가동률 향상에 기여

○ 탄약시설 적정 안전거리 정책 제시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 동시 보장 및 친환경 비군사화로 환경오염과 소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해소

○ BH,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회담대표 역량 강화를 통한 협상능력 배양

○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전까지는 현존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홍보

○ 韓美 억제전략위원회(DSC), 韓美 안보협의회의(SCM) 등 계기에 美 확장억제 공약 이행의지를 재천명하고, 보도를 통해 적극 홍보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를 위해 국회 및 기재부와 협조하여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집행하고, 합참 및 방사청 등 전력획득 사업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계획된 전력화 시기에 따라 적기 추진

(4) 기타 (참고자료)

□ 전방위 군사대비태세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우리 군 핵심 역량 강화

○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국방백서 참조

○ 국방부 업무계획 (정부업무보고), 국방부 홈페이지

□ 전쟁 지속능력 강화

○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 전투준비태세 업무 훈령
○ 군수품관리 훈령
○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훈령
○ 성과기반군수지원(PBL) 5개년 중기계획
○ 전시 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
○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 전시 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
○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 부품단종관리업무훈령
○ 수명주기관리계획 작성 지시
○ 3군 공통군수지원 방침 및 절차 지시
○ 국방탄약 업무수행 지시
○ 유도탄 관리 지시
○ 군수품 비축훈령
○ 탄약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
○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 국방교육훈련 훈령
○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 정훈문화활동 훈령

□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 국정과제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국정과제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국방부 6대 정책기조(국방부 홈페이지 : http://www.mnd.go.kr)

○ ‘9·19 군사합의’ (‘18. 9. 19.)

○ 군비통제정책서

○ 국방백서

□ 다양한 핵·WMD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 국가안보전략지침

○ ’19～’33 국방기본정책서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 5대 국방운영 중점 추진계획(‘18. 12. 3.)

○ 국방백서

성과목표 Ⅰ-1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정책수립 및 우리군 핵심역량 강화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적시·적절한 국방정책 추진으로 국방목표 달성에 기여**

추진방향	중장기 국방정책 기획·발전 및 홍보	단기 국방정책 및 안보현안 기획·조정· 관리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선진화된 국방재난·안전 체계 구축
핵심활동	•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국가안보 전략지침에 부합하는 중장기 국방 기본정책 수립 • 선제적·맞춤형 정책자문 및 포럼 실시, 연구 활동 지원으로 국방정책 내실화 • 국방백서 국문본 발간 전략적 소통(SC),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정책 홍보	• 적시적인 단기 국방정책 수립 및 조정 • NSC·국회·정부 부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국방정책 추진 여건 조성 • 한미 연합방위 태세 기반 하 안정적 군사상황 관리 및 전방위 안보위협 억제·대응 능력 발전 • 국내외 테러 예방 및 전쟁 수행능력 발전	• 국방사이버안보 임무수행체계 발전 • 사이버전 수행인력 전문화·정예화 • 사이버공격 대응역량 고도화 • 국방사이버안보 국제협력 강화	• 재난취약지역 해소 • 재난대응 역량 강화 • 국방 안전관리 기반 강화

□ 중장기 국방정책 기획·발전 및 홍보

○ 대통령의 안보 철학·국가안보전략지침이 반영된 중장기 국방정책 방향을 정립함으로써 국방부·합참·각 군간 정책 및 군사전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목표와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틀 마련

○ 정책연구·포럼·토론회·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과 정책 대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방정책의 품질 제고

○ 국방백서 발간, 전략적 소통(SC) 등의 국방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신뢰와 지지 확보

□ 단기 국방정책 및 안보현안 기획·조정·관리

○ 당해 연도 대통령(총리) 주관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국방 정책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업무 제시

○ 대통령의 통수 의도 구현을 위한 국방현안 상부 보고 수시 실시

○ 주요 국방현안 관련 B.H.·국회·유관부처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지속

○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간 국방정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제시로 軍心 결집 및 국방정책에 대한 軍內 공감대 형성

○ 안정적 군사상황관리 및 전방위 안보위협 억제·대응 능력 발전

○ 국내·외 테러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대테러작전부대 편성, 장비·물자 종합발전계획 체계적 추진

○ 국방부 전쟁수행능력 발전과 '20년 전작권 전환 FOC 검증평가의 성공적 수검 등 全軍的 노력결집으로 전작권 전환 기틀 마련

□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및 사이버기술의 발전 동향 등을 고려한 국방사이버안보 정책 및 체계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점 점검·분석 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확보

□ 선진화된 국방재난·안전체계 구축

○ 군 내 재난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난·안전 예방·대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방 재난·안전 제도 및 정책발전의 선진화를 도모함

(2) 세부 추진계획

□ 중장기 국방정책 기획·발전 및 홍보

○ **(중장기 정책 기획)** 안보환경 평가를 토대로 국가안보전략과 국방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방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 現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기본정책서의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차기 국방기본정책서 **대상 기간 ('24 ~ '38)의 안보환경 전망**

- 안보환경 전망과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차기 국방기본정책서의 **국방비전, 국방정책 기조 등 주요 개념 정립**

○ **(국방 정책 발전)** 국방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 정책발전에 기여

- 민간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발굴 및 대안제시 등으로 정책발전과 품질 제고

○ **(정책 홍보)** 정책설명회, 국방백서 발간 등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정책홍보 활동 강화

□ 단기 국방정책 및 안보현안 기획·조정·관리

○ **(단기국방정책 이행)** 주요 **국방정책 및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통제**로 대통령의 통수의도를 구현하고 국방 운영 목표를 달성하며, **국방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단기 국방정책 기획·조정

○ **(안정적 군사상황관리 및 전방위 안보위협 억제·대응 능력 발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 군사상황 관리**와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억제 대응 능력 향상으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작전대비태세 완비**

○ **(테러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 대테러 작전부대 편성, 장비·물자 종합발전계획, 드론테러 대응 종합대책** 등의 체계적 추진과 **지역단위 대테러·대화생방 테러 특수임무대** 추가지정, 군사정보기관(안보지원사령부)간 **국제 대테러 정보공유 협정**체결 확대 추진 등 **대테러 정책 및 대테러작전부대 장비·물자 보강 추진**

○ **(전쟁수행능력 발전) 전구급 연습준비·시행, FOC 검증평가** 성공적 수검, 국방부 **전시문서 개정, 직원 대상 전시교육** 등 **국방부 전쟁수행능력 발전 도모**를 통해 **체계적·적극적 전작권 전환 추진** 및 **유능한 안보달성**에 기틀 마련

□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 **(국방 사이버조직 임무수행체계 발전)** '22~'26 중기 부대계획과 연계하여 전군 사이버 조직의 연도별 보강안 수립 및 사이버보안 업무체계 정립

○ **(사이버 우수인력 확보 및 관리)** 사이버 전문인력 인사관리 개선 방안 후속 조치를 통한 인사제도 개선·발전 및 사이버 전문인력 경력관리모델 정립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발전)** 국방 사이버 직무표준체계 정립 및 사이버전문인력 양성 종합계획 수립

○ **(사이버위협 대응태세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 사이버공격 또는 침해로 발생한 사이버위기 상황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내·외 사이버훈련 적극 수행 및 취약점 등 사이버위협 정보의 전군 공유·활용 확대

○ **(사이버체계 확충 및 구축계획 수립)**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사이버체계 구축 및 고도화 및 해킹메일 차단체계, 인공지능 백신체계 구축

□ 선진화된 국방재난·안전체계 구축

○ **(예방중심의 군 재난관리 체계 구축)** 관계기관, 군부대-지자체가 연계된 훈련을 실시하여 통합된 재난대응체계 확립 및 실제 재난 상황을 대비한 도상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

○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지원역량 강화)**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각종 재난 발생 시 군 연락관을 판결하여 군의 지원 소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극적 지원태세 확립

○ **(해외재난 긴급구호 지원체계 및 국제협력 강화)** 해외재난 발생 시 구조인력 및 긴급구호물자수송 등 인도적 지원 활동 수행

○ **(전군 차원의 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국방부 안전정책 컨트롤타워 조직 신설 및 제반 법령 제정으로 각 기능과 및 각 군에서 수행 중인 안전업무 통합·조정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안보환경의 불확실성 증가**와 **전방위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등장**으로 보다 **일관성 있는 국방정책방향 제시 필요**

- 국가안보전략지침, 위협 분석, 국방정책 목표, 군사력 소요 평가 등을 기초로 대통령의 안보철학 및 안보지침을 반영한 합리적인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 성공적인 국방정책 수행을 위해 **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정책 홍보 필요성 증가**

- 국방정책 홍보문서인 국방백서 발간, 정책토론회, 포럼 운영 등을 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지지 확보
- 국방정책설명회 및 전략적 정책홍보를 통해 군 내외 공감대 형성

○ 초국가적 비전통적 위협의 확산과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국방 대비태세 확립 시 **정책추진 방향과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상이하거나 대립되는 주장 증가**

○ **군에 대한 미흡한 대국민 신뢰도**는 주요 국방정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 증대

* 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18년 10월 이후부터 평균 60% 정도이며 19년 말까지 거의 변화가 없음, 지난 10여년간의 추이와 비교해볼 때,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완만히 감소하고 있음 (KIDA, 2020년 2월 조사결과 中)

○ 북한·주변국 군사위협 등 전통적 안보위협과 함께, **전염병·재난·테러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증가** 추세

○ **사이버 관련 기술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변화에 대한 예측·대응 능력**의 필요성 증대

- 사이버 전문인력의 '획득-교육-보직-진급'에 이르는 **국방사이버 전문가 육성·관리체계 정립** 및 **인사제도 개선·발전**을 통해 사이버 분야에 필요한 전문가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고, 전문직위 등의 보직 관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사이버위협 기법·양상이 지능화·고도화·대규모화됨에 따라 **단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 증대**

- 전통적인 한·미 동맹에 기반하여 한·미 사이버협력의 수준과 범위 확대·강화 및 서울안보대화 사이버워킹그룹 개최 등 **양·다자간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 **초국가적 공조체계 구축 추진**

○ 재난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고 **신종재난** (아프리카돼지 열병, 코로나 19, 에볼라,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가운데 군 내 발생 안전사고는 **군의 신뢰 저하** 요인이 되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국방안전관리체계 정립 시급

《 대응 방안 》

○ 국방기본정책서를 중심으로 중장기 국방기본정책을 수립 및 국방정책포럼, 정책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한 국방정책 발전 추진

○ 국방백서 발간, 정책교육, 대국민 메세지 작성을 통해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국방정책 추진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

○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우호적 국방정책 추진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국방 전략적 소통(SC) 체계 정립 및 추진

○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정책 추진에 대한 유관부처 및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대책 강구

○ 초국가적·비전통적 위협 증대 대비 테러대응체계 개선(테러방지법 개정 등), 지역단위 대테러·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추가지정을 통한 골든타임 내 대응

○ 다양한 안보상항 고려 전구급 연습 관련 對美협의 추진과 병행 내부적으로 전작권 전환 FOC 검증평가의 성공적 수검을 위해 국방부 핵심과업 식별, 전시문서 개정 등 선제적 업무 추진

○ 사이버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이버 전문인력 인사관리 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교육·훈련체계 발전
○ 다양한 사이버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양·다자 간 협력 방안 모색 등 국제적인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초국가적 공조체계 구축
○ 국가재난관리 및 안전 활동을 군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재난·안전 예방·대비를 실시하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및 관리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초국가적 위협의 확산과 새로운 위협의 등장으로 국방대비태세 확립 시 **정책추진 방향과 한정된 자원의 배분**에 대한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상이하거나 대립되는 주장 증가

○ 군 조직은 각 군, 각 급 제대를 포괄하는 거대조직이므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엇박자 또는 **이해관계의 상충 가능성 존재**

○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및 남북대화에 대한 남북 간 입장차 외에도, **한·미 및 한·중간 입장, 국내 여론 등에서 갈등요소 내재**

- 남북 간 군사분야 합의의 북한 이행 지속 여부,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통일부·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조율된 가운데 추진해 나갈 필요

○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 시행 관련 對美 협의, 대국민·국회 설명, 언론 등 이해관계 집단의 갈등 가능성 존재

○ 주요 정책 고객만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국방정책 설명·홍보를 실시했을 경우 일부 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집단에서 오해할 가능성 존재

○ 사이버위협은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없으므로 부처별 담당 영역을 명백히 구분하기 곤란**하여 광범위한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인 대처 불가

-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의 연계下 국가안보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
- 사이버 위기 대응시 유관기관의 협업 강화 및 신속한 상황대응 조치를 위해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체계와 연계된 **국방 사이버 위기조치기구 개편** 및 **「국방사이버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발전**

○ 사이버영역의 국제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노력(UN GGE 회의, 탈린메뉴얼 등)이 지속 진행되고 있으나, **각 국의 이해관계가 상이**하여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

- 초국가적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사이버분야 **국제적 공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양자 및 다자간 사이버 협력 강화를 추진

○ 긴급구조지원부대(재난·탐색 구조부대 및 재난신속대응부대)의 재난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물자가 부족한 실정임

○ 해외재난 시 우리 군의 긴급구호물자 수송 지원을 위해 국제공조관계 형성이 필요함

○ 군 전력·장비·물자 고도화 등으로 여러 요인이 복합된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관련 부서 및 각 군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대응 방안 》

○ 「국가안보전략지침」, 「국방기본정책서」, 「국방백서」 등을 작성 및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관기관, 합참, 각 군 등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완화
○ 국방정책 추진의 성과 달성을 위해 각 유관부처, 각 軍간 업무협조 및 조정방안 강구
○ 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집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방정책 설명 및 요구자료 제공
○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위기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상황대응 방안 마련(인원 추가 편성 등 대책)

○ 테러방지법 개정 추진, 지역단위 대테러·대화생방테러특수임무대 추가지정 관련 대테러센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최근 전투와 유사한 수단에 의한 보편적 重大테러(메가테러리즘)로 진화하는 테러동향 (예: 프랑스 파리·인도 뭄바이 테러 등) 고려 군경 합동 테러대응능력 향상 필요성 강조

○ 전구급 연습 준비·시행, 전작권 전환 FOC 검증평가 등 국방부 차원의 선제적 업무추진으로 전쟁수행능력 발전 도모

○ 현안협업회의,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통해 일관적인 정책추진 노력 경주

○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연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국제적인 파트너쉽 강화를 통해 초국가적 공조체계 구축

○ 긴급구조부대를 위한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를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 확보

○ 해외재난 시 인도적 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구호 협력체계 강화

○ 군 내 안전사고 예방·대비를 위한 국방 안전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제도화

(4) 기타 (참고자료)

○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국방백서 참조

○ 국방부 업무계획 (정부업무보고), 국방부 홈페이지

성과목표 Ⅰ-2 전쟁 지속능력 강화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전	전쟁 지속능력 강화		
추진방향	전승 보장을 위한 전시 군수지원능력 확충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일전불사의 정신적 대비태세 확립
핵심활동	·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 및 정비 정책 추진 · 탄약지속능력 향상	· 실전적 부대훈련방법 개선 · 학교교육체계 개선	· 문화예술을 접목한 군 정신전력 강화

□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 및 정비정책 추진

○ 총수명주기 개념의 장비관리 기반을 정착하여 획득과 운영유지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요 전투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투준비태세와 효율적 군수지원을 보장

○ 민·군 협력을 통한 PBL 제도 확대 및 선제적 부품단종 대응과 적정수리부속 확보 및 운영효율화를 통하여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 첨단무기체계 운영을 위한 핵심 정비역량 식별 및 조직·인력을 최적화하고, 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하여 첨단전력의 안정적 운영 및 안전성을 보장

○ 4차 산업혁명 및 선진 민간기술을 군수분야에 적용하여 군의 군수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 장비 운영·관리 도모

□ 탄약지속능력 향상

○ 전시 소요 탄약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 부족탄약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저장능력 확대를 지속 추진

○ 탄약저장시설 현대화로 저장환경을 최적화하여 생존성을 보장하고, 탄약 신뢰성 평가 관련 정책발전과 저장시설 개선을 통한 수명향상

○ 전·평시 연합·합동 폭발물처리 능력을 지속 확보하고, 한국 지형의 특성을 고려한 탄약시설 적정 안전거리 유지대책 발전

□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 과학화훈련체계 확대를 통해 훈련환경 변화에 대한 제약사항을 극복하고 교육훈련 성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대훈련 전념 여건 보장 등 실전적 부대훈련방법 개선

○ 정예 간부를 양성하고, 합동·연합작전 수행 역량을 갖춘 군사 전문가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체계 개선

□ 문화예술을 접목한 군 정신전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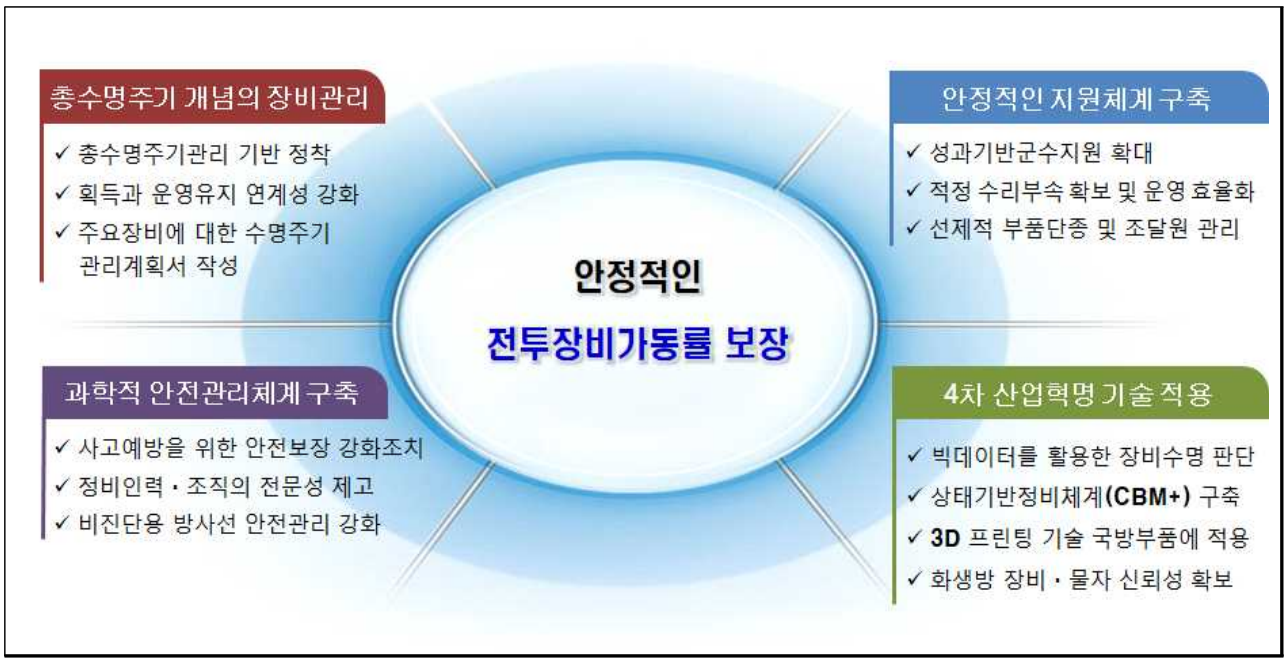
○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 및 필승의 군인정신 교육을 강화하여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확립

○ 장병 독서 활성화 및 문예활동 등 다양한 민간 문화예술 협력 사업을 통하여 활력 있고 사기충천한 국방문화 조성

(2) 세부 추진계획

□ 장비가동률 보장을 위한 장비 및 정비정책 추진

○ 추진방향



○ 주요 전투장비를 대상으로 총수명주기 개념의 수명주기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획득과 운영유지의 연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장비관리를 통하여 효율적 군수지원과 가동률을 보장

* 무기체계 및 주요장비(200종)에 대한 수명주기관리계획 작성

○ 민·군 협력을 통한 PBL 제도 확대와 부품단종관리를 통해 조달 및 정비지원에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고, 수리부속 수요예측 정확도 향상과 운영 효율화를 통해 자산의 과·부족 현상 방지 및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방경영 효율화에 기여

* 수리부속의 원활한 조달과 방위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PBL 사업 지속 확대('22년까지 15개 이상 장비에 적용)

* 수리부속 수요예측정확도를 83%까지 향상하고 서북도서(백령도, 연평도)에서 소요되는 수리부속을 사전에 인가 및 저장하여 장비가동률을 보장

* 군-업체 간 클라우드 기반 부품단종관리 정보공유체계 구축 추진

○ 최신기술을 활용한 과학화된 훈련체계를 구축하여 장비 운영 및 정비요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비정비에 활용되는 방사선 안전관리를 통해 첨단전력의 안전성 확보와 무의의 손실을 방지하는 등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를 보장

* K9 자주포 폐쇄기 등 안전사고 예방 구성품 장착 및 승무원·장비 안전조치 강화
* 방사성폐기물 처리, 작업종사자 직장교육/피폭/건강검진 지속 수행

○ 빅데이터 분석과 센서데이터를 활용한 장비운영, 정비관리 및 화생방 장비·물자 신뢰성 평가와 3D 프린팅기술 국방분야 적용을 통해 군수지원 효율성 제고

* 센서테이터 부착장비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상태기반정비 체계 구축
* 금속분야 국방부품 3D프린팅 제조기술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교육 추진
* 저장 화생방장비·물자 신뢰성평가 지속('20년 목표 : 20종, 180개 로트)

□ 탄약지속능력 향상

○ 일반탄약과 유도탄의 정비능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증액하여 수명을 연장하고 신뢰성 있는 탄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 탄약지속능력 유지를 위한 탄약정비 예산 확대 (단위 : 억원)

구 분	'20년	'21 ~ '25 국방중기계획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1,137	1,337	1,414	1,417	1,623	1,795
일반탄약	159	192	173	186	179	176
유도탄약	978	1,185	1,241	1,232	1,443	1,618

*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관리, 분석, 수요예측 할 수 있는 유도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절감, 가동률 향상 추진

○ 장기저장, 수명도래 탄약의 증가에 대비하여 탄약 비군사화 능력을 확대하여 폐탄약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처리** 및 탄약 저장공간의 효율적 활용여건 마련

* 탄약비군사화 시설 건설 및 추진 방향

구 분	처리 탄종	정책방향
내열형 소각시설	추진장약, 추진제, 가소성 폭약 등	군에서 동시 건설 추진 (영동 비군사화시설 내) * '18~'22
대형탄 분해시설	유도탄, 추진기관 등	
플라즈마 소각시설	신호탄, 조명탄 등	'22 ~ '23년 확보추진

○ 한국형 탄약 및 폭발물 안전기준 재정립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안전거리 조정방안을 정책심의로 결정하고, 탄약 안전기준에 대한 한·미 핵심그룹을 설립하여 헌장을 제정하고 안전 위해 요소 해소를 위한 노력 전개

* 현대화된 탄약고의 건립 추진과 국방과학연구소 교육과정에 탄약 저장 안전교육 포함하여 전문인원 장기간 육성

□ 전투임무 위주의 교육훈련 강화

○ 실전적 부대훈련방법 개선

- 마일즈 장비를 활용한 실전훈련체계 확대
- 기동과 실사격, 과학화 시스템이 통합된 실전적 과학화 훈련장 구축
- 훈련장 확보, 갈등관리 전담조직 운영, 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개발 등 교육훈련 전념여건 보장

○ 학교교육체계 개선

- 장교・부사관 양성교육체계 개선

  * 사관학교 합동교육 내실화, 장교・부사관 학군단 운영체계 개선

- 합동・연합작전 교육체계 구축 추진

□ 문화예술을 접목한 군 정신전력 강화

○ 장병 정신교육 성과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지원

- 장병 주도형「실감형 디지털 교재」제작
- 국방TV 프로그램 개선 및 제작
- 장병 눈높이에 맞는 영상교재 제작
- 장병 「정신전력교육 교안」제작

○ 정신교육 교관요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

○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참여형 인성교육 추진

○ 정신교육 성과제고를 위한 지도·평가 활동 및 Feedback 강화

- 정기(반기 1회), 수시(월 1~2회), 우수부대 선발 · 포상 (9~12월)

○ 양질의 도서 보급, 병영도서관 운영 지원 등으로 병영 독서 문화 확산 및 장병 독서활동의 체계적 뒷받침

- 장병 선호를 고려한 양서 보급, 병영도서관 도서구입비 확대 및 병사 대상 독서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 민간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전문예술단체 공연 및 문화예술 체험교육 등 향유 기회 확대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평시 장비가동률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적 도발 시 장비 불가동으로 즉각적인 대응이 제한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사태 발생 가능

- 무기체계 및 주요장비의 소요부터 획득, 운영유지, 폐기까지 전체 수명주기 관점의 체계적인 장비관리 필요
- 소요예측 정확도의 한계, 부품단종, 소량소액 부품의 계약률 저조 등 조달여건 악화로 인한 장비가동률 보장 애로
-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라 무위의 첨단전력 손실 방지를 위한 과학화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정적 장비운영과 정비를 위한 기술능력 확보 필요

○ 전시 탄약지속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나 국가재정 여건상 예산 확보 제한

○ 기술집약형 軍으로 변화에 부흥하기 위한 교육훈련체계 개선과 전작권 전환 대비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 배양 요구

《 대응 방안 》

○ 전 무기체계 및 주요장비를 수명주기관리 기반하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PBL 확대 등 민·군 협력을 통한 조달여건 개선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안전 및 장비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 전투준비태세 보장

○ 전시 탄약소요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여 예산 획득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우방국와의 협력 및 탄약 수명관리 능력을 향상하여 예산소요를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

○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과학화 교육훈련체계 확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교육체계 개선, 합동·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육체계 개선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장비수명판단 및 정비결함 분석 등 장비운영에 있어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있지만, 장비가동률과 연계한 현실성 있는 분석 및 효율적 활용방안 부족

○ 탄약의 안전한 저장을 위해서는 탄약고와 주거시설 간 안전거리가 유지되어야 하나,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지역개발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탄약고 간 안전거리 축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도시화에 따른 훈련장 확보 제한, 민·군 갈등관리에 대한 야전 부담감 증대, 교육훈련 관리에 대한 노력과 시간 소요가 지속 증가

○ 장병들의 군 복무기간 중 정서적으로 느끼는 고립감과 사회와의 단절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확대 필요성 인식

《 대응 방안 》

○ 장비 운용제원, 환경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적정 장비수명 판단 및 소요를 산출하고, 장비운영중 센서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통하여 효율적 예방정비와 가동률 향상에 기여

○ 탄약시설 적정 안전거리 정책 제시로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 동시 보장 및 친환경 비군사화로 환경오염과 소음 등에 대한 지역주민 민원 해소

○ 훈련 소요와 갈등수준을 고려한 훈련장 부지 확보, 효과적인 갈등관리체계 운용, 국방 교육훈련관리체계 개발 추진 등으로 교육훈련 전념 여건 보장

○ 전문 예술단체의 군부대 방문 공연과 문화예술 체험 교육 확대 등 민·군간 유대강화 및 활력 있고 창의적인 정신전력 강화 추진

(4) 기타 (참고자료)

□ 전쟁 지속능력 강화(국방부 관련 훈령 및 규정)

○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
○ 전투준비태세 업무 훈령
○ 군수품관리 훈령
○ 성과기반군수지원(PBL) 훈령
○ 성과기반군수지원(PBL) 5개년 중기계획
○ 전시 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
○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 전시 군수지원소요 및 능력판단 훈령
○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 부품단종관리업무훈령
○ 수명주기관리계획 작성 지시
○ 3군 공통군수지원 방침 및 절차 지시
○ 국방탄약 업무수행 지시
○ 유도탄 관리 지시
○ 군수품 비축훈령
○ 탄약수명관리를 위한 신뢰성평가 업무 훈령
○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 국방교육훈련 훈령
○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 훈련장 갈등관리 훈령
○ 정훈문화활동 훈령

성과목표 Ⅰ-3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추진방향	'9·19 군사합의' 이행에 기초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정책 발전 및 기반 강화
핵심활동	· 적대행위중지 지속시행 ·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추진 ·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 군사회담 역량강화 및 대비태세 상시 유지 · 대북 안보현안에 대한 분석·평가 등 즉응태세 유지 ·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	· 군비통제 정책 발전 및 군비통제 연구역량 확대 · 국제 군비통제 활동 적극 참여 · WMD 대응능력 향상 및 WMD 확산방지 노력 참여

□ '9·19 군사합의' 이행에 기초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 '9·19 군사합의' 이행 및 군사회담 대비태세 유지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긴장완화 토대 마련

- '18. 11. 1. 이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조치 지속
-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조치
  * △JSA 자유왕래 △DMZ내 남북공동유해발굴 등
-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 남북군사회담 개최에 대비한 역량강화, 예상 의제 개발, 의제별 보충·대응논리 구상, 자체 워크숍 등 회담 즉응태세 유지

○ 정부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군사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발전에 기여

- 범정부 차원의 남북(군사) 관계 현안 관련 협의를 위한 정세평가·분석 및 국방부 입장 정립

- 대북정책 수립 관련 정부의 주요 회의체 및 현안토의에 참석하여 국방부 입장 반영

○ 군사상황에 대한 적시대응 및 대응능력 발전을 통한 위기관리역량 강화

- 남북(군사) 관련 주요 안보현안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응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위기관리 대응태세 유지

- 남북교류협력에 대비한 군사적 지원 및 보장 준비

- 동·서해 남북관리구역 통행 인원(차량)에 대한 군사적 지원 보장

□ 군비통제정책 발전 및 기반 강화

○ 「군비통제정책서」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과 남북관계(군사) 변화에 따라 분야별 군비통제정책 보완·발전

○ 군비통제 전문가 발굴/관리로 정책연구 활성화, 정부 대북 정책(군비통제분야) 지원 등을 통한 군비통제 기반 강화

○ 국제 군비통제 협력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함으로써 국가 신뢰도 제고 및 한반도 안보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국내·외,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WMD 대응능력 발전 및 WMD 확산 차단 활동에 적극 동참

(2) 세부 추진계획

□ **'9 · 19 군사합의' 이행에 기초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 정부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군사분야 지원

- 정부 대북정책 관련 국방부 차원의 지원활동
- 남북관계 상황평가 및 상황 대비태세 유지
- '9·19 군사합의' 관련 대내·외 교육 및 SC 활동

○ 대북군사상황 적시대응 및 대응능력 발전

- NLL 위기관리 및 '6·4 합의' 이행
- 남북연락채널 유지 및 개선·발전
- 북한 정세평가 및 정치이벤트 발생시 분석·평가

○ '9·19 군사합의' 이행 및 군사회담 대비태세 유지

- 회담대표 역량 강화를 통한 군사회담 대비태세 유지
- '9·19 군사합의' 이행 관련 평가 및 보완사항 도출
- '9·19 군사합의'의 이행을 통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노력 강화

□ **군비통제정책 발전 및 기반 강화**

○ 군비통제 정책 역량 강화 및 군비통제 추진 기반 조성

- 국방부 군비통제 정책역량 강화
- 범정부 차원의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강화

○ 국제군비통제 협력 강화

- 군비통제 국제레짐 내 의무사항 적극 이행 및 선제적 대응
- 화생무기금지 관련 국제협약 이행
- 한반도 군비통제에 관한 대내외 지지 및 공감대 확산

○ 대확산 협력활동 강화

- 동맹의 WMD 위협 대응태세 및 능력 향상
- 국방 화생정책 발전 및 우리 군 대응능력 향상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南北·美北 정상회담의 지속적인 추진

- 남북정상회담 시 국방분야 의제·협상방향 검토
  - 정상회담 상정 가능 국방분야 의제 염출 및 국방부 입장 검토
- '다양한 군사외교 활동 관련 對北정책 공조 지원
  - 한·미 SCM(11월), KIDD(4월) 및 DTT(4월) 에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분야 작성·발표 진행

○ '18년 남북간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및 '9·19 군사합의' 체결 등으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의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작년 한 해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등 남북 및 북미간 대화가 정체된 측면

- 다만, △정부 차원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코로나-19 공조를 위한 보건분야 협력 가능성 등을 감안, 대화 재개 가능성도 존재

- 군비통제 관련 논의 가능성에 대비, 사전 철저한 준비 긴요

○ 강대국을 중심으로 INF 조약 폐기, 첨단무기 개발·전력화 등 군비경쟁 요소가 증가하고 있는 바, 역내 군비통제를 위한 공조 대응은 일정 수준 한계 노정 예상

- 이와 별도로 국제 군비통제레짐 차원에서 AI, 자율살상무기, 사이버 등 새로운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규범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익을 반영한 규범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경주 필요

○ 기존 북한의 화생무기 등 전통적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

-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감염병 대응단계 '심각' 격상, 세계보건기구(WHO)의 'Pandemic(대유행)' 선언 등 화생 위협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변화 및 관심도가 대폭 증가

- 이에, 외부의 화생위협에 대한 우리군의 전방위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강구 필요

《 대응방안 》

○ 정부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군사분야 지원
○ 대북군사상황 적시대응 및 대응능력 발전
○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된 군비통제정책 발전 및 보다 진전된 군비통제 추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국제군비통제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입장 반영 및 국가 이익에 우호적 여건 조성
○ 北 화생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구비 및 WMD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남북관계진전 및 남북대화 추진은 남북 간뿐만 아니라, 한·미 및 한·중 간 관계, 국내 여론 등에 의해서도 갈등요소 쟁점화 가능

-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의 북한 이행 여부, 비핵화에 대한 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통일부·외교부 등 유관부처와 조율된 가운데 추진해 나갈 필요

○ 통일부(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외교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 '평화체제' 관련 협의에 대비, BH·외교부·국정원·통일부 등 유관부처 간 공조체제 유지

《 대응방안 》

○ BH, 통일부, 국정원, 외교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회담대표 역량 강화를 통한 협상능력 배양

○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 국방부 차원의 입장 자료 및 성명 발표 자료 작성

(4) 기타(참고자료)

○ 국정과제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국정과제 :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 국방부 6대 정책기조(국방부 홈페이지 : http://www.mnd.go.kr)

○ '9·19 군사합의' ('18. 9. 19.)

○ 군비통제정책서

○ 국방백서

성과목표 Ⅰ-4	다양한 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다양한 핵 · 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추진방향	다양한 핵·WMD 위협 억제·대응 및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 발전	미사일 및 국방 우주정책 발전	핵·WMD 대응 핵심전력 확보
핵심활동	•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추진 • 핵·WMD 대응능력 확보 •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수립 관련 국방분야의 역할·지원 강화	• 미사일 역량 강화 • 北 미사일 위협 위기관리 • 국방우주 역량 강화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전력화 추진 • 핵·WMD 대응 핵심전력 방위력개선비 적기 집행

□ 다양한 핵·WMD 위협 억제·대응 및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 발전

○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을 통한 실효성 제고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에 지원

○ 다양한 핵·WMD 위협에 대해 효과적 대응을 위한 우리 軍의 독자적 억제·대응 개념과 수행체계의 발전

○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 국제사회·기구간 협력체계 구축 등 군사적 지원방안 모색

□ 미사일 및 국방 우주정책 발전

○ 韓美 미사일방어 태세 실행력 제고, 관련 국제레짐 및 지침이행, 주요국 미사일정책 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軍의 미사일역량 강화에 정책적으로 기여

○ 북한 미사일 위협 상황 발생 시 정책결정권자의 정무적 판단을 지원하고, 향후 대응방향 마련을 위한 위협 분석·평가 실시

○ 중·장기 국방우주력발전 과제를 도출 및 추진·관리를 통해 우주 전장화에 대비한 국방우주 역량 강화 도모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

○ 다양한 핵·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안보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핵심전력의 적기 전력화 진행

○ 핵·WMD 대응 핵심전력은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확보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다양한 핵·WMD 위협 억제·대응 및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 발전

○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추진

-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지향적 확장억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韓美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 추진

- 미국의 對韓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 채널을 통하여 긴밀한 소통 지속

○ 핵·WMD 대응능력 확보

- 우리 군의 핵·WMD 대응능력 확보를 통한 다양한 핵·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 북한 핵·WMD 위협 평가 및 실효적인 억제·대응정책 마련

○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 수립 관련 국방분야의 역할·지원 강화

- 북한 비핵화 정책 수립 관련 국방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국방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체계 및 유관부서 협력체계 구축

-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우호적 국제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 핵·WMD 관련 국제 핵군축 및 비확산 정책, 전략물자 및 수출 통제에 관한 업무 추진

□ 미사일 및 국방 우주정책 발전

○ **(北 미사일 위기관리 및 대응방향 수립)**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 발생 시 정책결정권자의 정무적 판단을 보좌하고, 北 미사일 위협 예측 및 대응방향 수립을 위해 정책적 차원의 분석·평가 실시

○ **(4D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 한미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을 위한 '4D 이행지침'이 개정('19. 10월) 됨에 따라, 세부 평가과제를 도출하고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지침의 실행력 제고

○ **(미사일 분야 국제레짐 및 지침 이행)** HCoC, MTCR 등 미사일 관련 국제레짐 및 지침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우리 軍의 미사일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투명성 확보

○ **(국방우주력 발전 추진계획 수립·관리)** 국방우주력 발전 과제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연간 시행계획 작성 및 관리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

○ 핵·WMD 대응 핵심전력으로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대응으로 구분하여 확보 추진

- 전략표적타격 : 적 위협을 실시간 탐지하고 파괴수단 결심 후 타격
- 한국형미사일방어 : 적 미사일 정보 분석 후 추적하여 요격
- 압도적대응 : 적국의 핵·WMD 사용 시 적 지휘부를 타격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남과 북은 지난 3차례 남북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기대감이 있었음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최종 합의 결렬 후 양 정상 차원의 신뢰 관계와 대화 모멘텀을 지속하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 합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임

○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과 최근 17회 ('19. 5월 ~ '20. 3월) 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미사일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고 있고,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WMD 연구개발·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

○ 국방부는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전까지는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은 물론 강한 안보환경 유지도 반드시 필요함을 인식

○ 특히 미중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주변국들 간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과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안보환경 속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주변국들,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

○ 국방비는 안보환경 변화 외에도 재정당국의 정부재정 정책, 국회 예산심의 동향 등 외부 변수에 따라 결정되며, 최근 전세계적 위협인 코로라 19 극복을 위해 예산이 우선 투입됨에 따라 국방비의 극적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북한은 SCUD급~ICBM급 탄도미사일 800여 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이스칸데르와 유사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미사일 발사 플랫폼과 발사체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중·일·러 등 주변국은 동북아지역 내 전략적 우위 확보를 위해 극초음속 무기, 우주 전력 확보 등을 추진 중이며, 이는 향후 우리 안보에 도전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핵·WMD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 軍의 대응능력 구축이 필수적임

《 대응방안 》

○ 다양한 핵·WMD 위협에 대응정책과 위기관리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美 확장억제의 실행력 제고

○ 정부 유관부처 및 국방부 유관부서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전략 수립을 국방분야에서 적극 지원 보장

○ 핵·WMD 대응체계 개념 발전, 4D 이행지침 실행력 제고 및 국방 우주력 발전 추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인 국방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재정여건 모니터링 강화 및 관련기관 대상으로 국방정책 구현을 위한 적정한 재원 반영의 필요성 설명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 유관기관 합동 북 미사일 위협 분석·평가를 통해 위협 예측 및 대응 방향 수립

○ 해외 미사일·우주 정책 평가를 실시하여 주변국의 미사일·우주 정책 동향 파악 및 정책적 함의 도출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를 위해 전략표적타격, 한국형미사일방어, 압도적 대응으로 구분하여 계획 수립 및 확보 추진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18. 7. 5 대통령께서 정부의 확고한 비핵화 정책방향과 노력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이끌고 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비핵화 합의 무산시에 대비한 계획도 준비할 것을 지시하심(’18. 7. 5.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3차 보고시, "북한 및 잠재적 위협에 동시 대비 가능한 계획 수립할 것"). 또한 북한의 핵·WMD 위협 중심에서 북한을 포함한 다양한 핵·WMD 위협으로 대상이 확대되면서 억제·대응 개념의 보완 및 전력 건설 우선 순위 조정 등 필요

○ 북한의 핵·WMD 위협 고도화에 따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협상은 교착되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발이 새로운 일상(뉴노멀)적 상황으로 인식되어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 신뢰성 상실 및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확산될 가능성 높음

○ 美中 간 전략적 경쟁 가속화 등 역내 안보 질서 변화, 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른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 및 한미 맞춤형억제전략의 신뢰성이 도전에 받는 상황을 우리 국방력 강화의 기회로 활용

○ 한정된 국가예산 재원을 바탕으로 핵·WMD 대응 핵심전력 구축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전력획득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합참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 대응방안 》

○ 국방부 북핵TF 회의 운영을 통해 軍 및 정부 유관부처의 핵·WMD 억제·대응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통제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전까지는 현존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을 홍보

○ 韓美 억제전략위원회(DSC), 韓美 안보협의회의(SCM) 등 계기에 美 확장억제 공약 이행의지를 재천명하고 회의성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홍보

○ 긴밀한 한미 공조 下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방(군사) 차원의 적극적 지원 및 다양한 국방협의체를 통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설명

○ 핵·WMD 대응 핵심전력 적기 전력화를 위해 국회 및 기재부와 협조하여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및 집행하고, 합참 및 방사청 등 전력획득 사업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계획된 전력화시기에 따라 적기 추진

(4) 기타 (참고자료)

○ 국가안보전략지침

○ '19～'33 국방기본정책서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 5대 국방운영 중점 추진계획('18. 12. 3.)

○ 국방백서

전략목표 Ⅱ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기 본 방 향

◇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을 구현하고 동맹현안의 안정적 추진·관리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한미동맹 구축

○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면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동맹현안을 관리

○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역내 다자/소다자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한반도·동북아 안보환경 조성

◇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추진

○ 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한 전환조건 재점검 및 준비 착수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군 능력 완비

◇ 국제적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국방교류협력 강화·발전

○ 확장된 국방교류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전통적 우방국 및 신흥협력국들과 국방교류 및 방산 협력을 질적인 심화·발전

○ 주변국(중·일·러)과의 역내 안보관리와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및 교류 협력 강화

○ 다자안보회의에서의 적극적 활동과 주도적 역할을 통해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및 우리 안보정책 지지 확산

◇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고, 능동적 파병을 통해 국익 등 파병성과 확대 및 국제협력으로 선진 방위역량 확충에 기여

○ 해외파병 부대의 국제평화 유지활동 및 국방협력 임무 지속 수행

○ 파병 법률 제정, 긍정적 여론 강화 등을 통한 안정적 파병 여건 조성

○ 파병 관련 국제 군사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국제적 안보역량 강화

전략목표 2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국방교류 협력 증진

(1) 주요 내용

□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및 미군기지 건설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 유지 下에서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

○ 평택 미군기지 건설 및 미군부대 이전, 반환기지 환경정화 및 매각 추진

□ 양자·다자회의 확대 등을 통해 국방교류협력의 내실화 추진 및 적극적인 국제평화유지활동으로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

○ 양자회의, 다자안보협의체 등 다양한 계기에 주변 4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아세안,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협력의 외연을 확장

○ 파병부대 간 연합훈련, PKO 역량 전수 등을 통해 유사시 국제사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한미동맹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	-	-	-	49.9%	52.4%	'19년 실적인 49.9%를 감안하여 매년 0.5%p 상승을 목표로하여 최종 '24년에는 52.4%를 목표로 설정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유·무선 설문조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여론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인식도 조사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Ⅱ-1. 미래지향적인 한·미 군사동맹 발전 추진율	100%	100%	100%	100%	100%
Ⅱ-2. 양자, 다자 국제협력 및 국제평화활동 추진실적	100%	100%	100%	100%	100%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변화하는 안보 상황 下 한미동맹 강화 요구 및 전작권 전환 추진에 따른 국민의 안보 불안 우려

○ 미군 반환대상기지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미측 책임 요구 증대

○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 표방으로 세계 안보 및 경제 질서에 불확실성 증대

○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국내외 요인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에 놓여 있음.

《 대응 방안 》

○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Mil - Mil 차원의 국방외교 활동 강화, 동맹협력 수준 · 범위 심화 · 확대 추진 등

○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 미국 지원 축소 등과는 무관하며, 한미 연합지휘체제 하에서의 지휘관계 전환임을 명확히 설명

○ 반환대상 기지는 SOFA「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에 따라 한·미 간 공동조사를 통해 정화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측이 치유하고 반환토록 조치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 및 대화 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 구축
○ 대응매뉴얼 발전,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우리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주한미군 THAAD 배치 등 대북 억제를 위한 노력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미군기지 이전·재배치 등 한미동맹 현안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간 갈등 예상

○ '전작권 조기 전환' 관련 '조건'이 아닌 '시기'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인식 및 한국군의 북 위협 대비 능력 부족으로 안보 공백 초래 우려

○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수준에 대한 한·미 간 이견

○ 국제사회에서 국익 중심의 국방외교활동 수행으로 국방교류협력 상대국 간 갈등 등으로 곤란한 상황 발생

○ 파병은 국내외 여론에 민감하여 국회 동의 추진 간 갈등 상존

《 대응 방안 》

○ 주변국 및 지역주민들에게 현 상황 및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소통 강화
○ 전작권 조기 전환은 한미가 旣 합의한 전작권 전환 틀을 감안하여, 한국군 능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설명
  * 한국군의 능력의 필요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최신화하여 한국군 능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중
○ 조기반환된 반환대상기지에 대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오염 정화에 대한 한·미 간 이견 해소방안 마련 중

○ 관계가 불편한 국가간 국방외교 추진시 가급적 Low-Key로 추진하고, 상대국과 계속적 소통을 통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 파병 관련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다각적 성과 홍보를 통한 대국민 지지기반 확보

(4) 기타 (참고자료)

□ 관련 책자

○ 2018 국방백서

□ 관련 홈페이지

○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및 UN 홈페이지 (http://www.un.org)

○ 주재국 인터넷홈페이지 : 중국, 일본, 러시아, 다자협의체 등

성과목표 II-1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전환**

추진방향	한·미 협의 및 공조체계 강화	조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핵심활동	• 한·미 협의체를 통한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 • 강력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유지	• 전작권 전환 이행조건 재점검 및 준비 • 한국군 능력 완비로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 체제 구축	• 주한미군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 동맹현안 해결을 위한 한·미 채널 유지

□ 조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 전작권 전환조건 재점검 및 준비 착수

- 한국군 능력 조기 확보·구비를 목표로 계획 보완·수정

- 한미 정부차원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합의, 합의 이행을 위한 한·미 군사당국(韓. 합참 - 주한미군사) 간 전환계획 발전

- 한국군의 책임 국방 의지와 주도적인 능력 확보가 국민 신뢰로 이어지고, 한미 동맹의 발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군 능력 완비

- 미래지휘구조 구축,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및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 대응능력 확보

- 전략문서 발전, 연합 연습 및 검증평가 실시

□ 상호보완적인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이 우리 국익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 국방 당국 간 정책·전략적 대화 지속

○ 안보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동맹협력의 모멘텀을 지속 유지하면서 협력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확대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미 국방당국 간 정책공조 지속

○ 주한미군 주둔여건 및 전투준비태세 보장 노력 지속

□ 평택 미군기지 건설

○ 평택 미군기지에 73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기지 건설과 평택지역으로의 미군부대 이전

○ 반환기지 환경정화 및 매각 등 사업 마무리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상호보완적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구현

- 美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관련 한미 국방부 고위급 간 정례 및 수시 협의 확대

  * 한·미 장관회담, SCM, KIDD, DTT 등 고위급 정례·수시 협의 활성화

-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美 조야의 지지와 지원 확대를 위하여 정책공공외교 확대

  * △美 행정부·의회·Think-Tank 대상 아웃리치, △美 방한단 대상 국방 정책설명회, △한·미 국방·안보 학술교류 활성화 등

-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협력을 지속 확대,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동맹현안의 안정적 추진·관리

- 한미간 긴밀한 공조 下 연합연습·훈련 시행으로 대내·외 굳건한 한미동맹 현시
- 주한미군 순환배치 및 전투준비태세 여건 보장
- 연합사 본부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 추진
- 주한미군 훈련장 안전관리, 미군기지 환경 문제 등 민군관계 현안의 효율적 관리

○ 북핵·미사일 대응 한미일 3국 대북정책 공조 강화

  *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북·핵미사일 대응 TTX 지속 추진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 전작권 전환조건 재점검 및 전환계획 발전

- 한미 정책적·군사적 협의 추진 ('20년 ~ 전환 시점)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부록 발전 ('20년)

○ 한국군 능력 확보

- 한국군 능력 확보 지속 ('20년 ~ 전환 시점)
- 한국군 능력 확보 여부 평가 ('20년 ~ 전환 시점)

○ 연합연습 및 검증평가

- 미래지휘구조 적용 下 연합 연습 및 검증평가 ('20 ~ 전환시점)
  * 기본운용능력 (IOC, '19년 완료), 완전운용능력 (FOC, '20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 전략문서 발전(TOR/SD#3) 및 승인 ('20년 ~ 전환 시점)
  * TOR/SD#3 (Terms of Reference / Strategic Directive) : 관련약정 / 전략지시3호

○ 국민적 공감대 형성

- 전작권 전환의 당위성 및 필요성, 추진내용 등 홍보 (지속)

□ 평택 미군기지 건설

○ 총 73개 프로젝트(기본 프로젝트 57건-226동, 추가 프로젝트 16건-21동으로 구분 관리) 공사에 대해 인수인계 추진 등 조기 마무리 후 부대 이전 여건 보장

○ '21년까지 대부분 부대의 평택 이전을 추진하고, 연합사를 비롯한 나머지 부대도 용산공원조성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조속히 이전

○ 부대가 이전한 후에는 기지 내에 산재한 잔류부대의 통합 및 재배치를 추진하고, SOFA 절차에 따라 반환 전 환경정화 실시

○ 주한미군기지 이전 재원확보를 위해 기지 매각 및 처분 등 후속조치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변화하는 안보상황 下 상호보완적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노력 필요

○ 전작권 전환 추진에 따른 국민의 안보 불안 우려

- 주한미군 철수, 미국 지원 축소 등 연합방위태세 약화 초래 우려

○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역할에 대한 오해

- 일부 언론에서 미측이 유엔사를 강화하여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를 통해 주도권을 가지려 한다고 보도

○ 미군 반환대상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에 대한 미측 책임 요구 증대

《 대응방안 》

○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Mil - Mil 차원의 국방외교 활동 강화, 동맹협력 수준 · 범위 심화 · 확대 추진 등

○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 철수, 미국 지원 축소 등과는 무관하며, 한미 연합지휘체제 하에서의 지휘관계 전환임을 명확히 설명

* '미군 사령관 +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에서 '한국군 사령관 +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변경

○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조직이며, 한반도 내 전시 작전지휘와 무관함을 설명

○ 반환대상 기지는 SOFA「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01.1.18)」에 따라 한·미 간 공동조사를 통해 정화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미측이 치유하고 반환토록 조치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주한미군 THAAD 배치 등 대북 억제를 위한 노력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 미군기지 이전 · 재배치 등 한미동맹 현안에 직·간접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 간 갈등 예상

○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조건이 아닌 시기에 기초한 전환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인식, 北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한국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안보 공백 초래 우려

○ 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수준에 대한 한·미 간 이견

* (韓) 70년동안 10만명당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초과하는 오염(한·미 간 협의)
* (美) 국방성지침에 의거 3~5년 내 암 발병이 확실한 수준의 오염 (주한미군사령관 판단)

《 대응방안 》

○ 주변국 및 지역주민들에게 현 상황 및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소통 강화

○ 전작권 조기 전환은 한미가 旣 합의한 전작권 전환 틀을 감안하여, 한국군 능력을 조기에 확보함으로써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임을 명확히 설명

* 한국군의 능력의 필요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최신화하여 한국군 능력 확보가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

○ 조기반환된 반환대상기지에 대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오염 정화에 대한 한·미 간 이견 해소방안 마련 중

(4) 기타 (참고자료)

전작권 전환 추진경과

□ 전작권 전환 합의

○ '06. 9. 16, 한·미 정상, 전작권 전환 (韓. 주도 - 美. 지원) 합의

* '07. 2. 28, 한미 국방장관, 전환 일자 합의 ('12. 4. 17.부)
* '07. 6. 28, 「전략적 전환계획 (STP)」 승인 (韓. 합참의장 - 주한미군 선임장교)

○ '10. 6. 26, 한·미 정상, 전환시기 조정 ('15. 12. 1.부) 에 합의

* 북한 군사위협 (핵·미사일 도발, 천안함 공격), '12년 한미 대선, 국민 여론 등 고려
* '10. 10. 8, SCM, 「전략동맹 (SA) 2015」에 합의, 기존 「전략적 전환계획」을 대체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 '15. 11. 2, 한미 SCM,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승인

* ① 연합방위 주도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②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③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 '17. 6. 30, 한·미 정상,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합의

* '17.10.28, 한미 SCM,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큰 틀의 추진방향(국방역량 확충을 통한 조건 구비 가속화, 동맹·연합방위태세 강화) 합의

○ '18. 10. 31, 한미 SCM, '연합방위지침' 합의,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공동 노력 경주에 공감

* △現 연합사 체제 유지,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사령관, 미군 4성 장성을 부사령관으로 임명, △주한미군, 유엔사, 확장억제를 지속 유지

○ '19. 6. 3, 한미 국방장관회담, 미래 연합군사령관은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성으로 임명하는 방안 승인

○ '19. 11. 15, 한미 SCM, 미래연합사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 결과 검토, '20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추진 결정

성과목표 II-2	국제적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교류·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발전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동북아 협력 질서 구축과 세계평화 · 발전에 기여**

추진방향	주변국들과 전략적 환경에 기초한 맞춤형 국방협력 강화	국익에 부합하는 전략환경 조성을 위해 국방교류협력의 내실화	국제평화 유지활동 기여 확대 및 재외국민 보호 강화
핵심활동	· 주변국들과 전략적 소통 강화 및 상호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국방협력 추진 · 다자협력 강화로 포괄적 안보역량 강화 및 국제적 지지 기반 확대	· 맞춤형 국방교류협력 추진 · 주요 안보협력국과 국방교류협력 지속 · 국방교류협력 기반 강화	· 평화유지 활동의 국제기여 확대 및 평화정착 기반 조성 · 해외파병부대의 임무성과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국제적 우발상황 대비, 군 자산을 활용한 재외국민 보호 강화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실용적 국방외교를 추진하고 주변국 (중·일·러 등)들과 양자 간 전략적 협력 채널 구축 및 한반도 안보 정책 공감대 확산

○ 주변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위한 국방교류협력의 지속·강화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중·일·러 등 주변국의 건설적 역할 견인

□ 확장된 교류협력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방교류협력의 내실화 추진

○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차원의 국제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 전통적 우방국과는 정례협의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국방교류협력이 미진했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방협력기반 마련

□ 역내 다자안보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유리한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및 우리 안보정책 지지 확보

□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

○ 국제평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발언권을 강화함으로써 국격을 제고하며, 유사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파병부대 간 연합훈련, PKO 관련 다자협의체* 참가, PKO 역량 전수 등을 통해 국방교류협력의 기반 강화

* 제1~3회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참가(국방정책실장, 군사지원본부장), 제4회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한국 개최 예정('21.4월)

(2) 세부 추진계획

□ 주변국들과 양자 국방협력 강화

○ 주변국(중·일·러 등)의 특성을 고려한 양자간 실용적·맞춤형 국방협력 추진으로 주변국과의 군사적 신뢰 증진

- (중국) 양국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위기관리 소통채널 마련을 위한 국방교류협력의 범위 확대 및 다변화

- **(일본)** 독도문제 등 역사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실용적 우호가 가능한 군사 분야에서부터 교류협력 추진
- **(러시아)**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견인을 위한 양국 간 국방협력 활성화
- **(몽골/CIS)** 교류·협력 심화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북정책 지지 유도

□ **동남아 개별국가들과 국방교류 협력 활성화**

○ 정례협의체 확대, 방산협력 활성화 등 개별국과 국방협력 증진을 통한 협력 기반 강화
- 전통적 방산협력 대상국과의 협력 활성화(인니·필리핀·태국)
- 상대적으로 북한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 국방협력 기반 구축(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 고위급 정례회의(차관급) 개최를 통한 국방협력 강화(베트남·필리핀)

□ **국방교류협력의 내실화**

○ **(유럽/대양주)** 주요 유엔사 회원국과의 전략적 안보협력 및 교류협력 국가 다변화를 통한 국방외교력 강화
- (서유럽) 주요 유엔사 회원국과의 전략적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
- (북·동유럽) 체코, 폴란드, 핀란드 및 발트해 연안국 등으로 교류협력 국가를 다변화
- (CIS) 우즈벡, 카자흐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정례협의 활성화로 신북방정책 우방국 확보

○ **(중남미)** 잠재적 방산협력 대상국과의 국방협력·교류 활성화
- 방산 협력 논의가 진행 중인 국가와의 국방협력 활성화(파라과이·칠레·페루)
- 잠재적 방산 대상 국가와의 협력 기반 구축(멕시코, 과테말라)
- 보훈 외교를 활용하여 국방협력 지지기반 발전(콜롬비아)

○ **(중동)** 우방국과의 국방·방산협력 기반 강화

- 국방협력파병(아크부대)을 통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UAE)
-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국방협력활동 추진(사우디·오만)

○ **(아프리카)** 친북성향 국가 대상 적극적인 국방외교 추진 및 잠재적 방산협력 대상국과의 협력 추진

- 친북성향 국가들 대상으로 적극적 국방외교(우간다·에티오피아·앙골라)
- 신규 방산시장 개척을 위한 국방외교활동 추진(보츠와나)

□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다자안보협력 강화

○ 아시아 안보회의,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뮌헨 안보회의 등 주요 다자안보회의체에 적극 참여 추진

- 연설 및 양자회의 등을 통해 우리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대 및 공조 견인
- 테러, 난민, 재난, 해양 분쟁 등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비전통적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

○ 서울안보대화(SDD)를 통한 국방분야 다자협력기반 구축 및 역내·외 다자협의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 사항을 반영한 논의 진행으로 참가국 간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여 다자협력기반 구축
- 고위급 연설, 한반도 세션 진행 등을 통해 우리 국방·외교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대외적 지지 확보

□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

○ 파병 관련 국제협력 및 기여 확대

-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4월)를 계기로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의제를 제시하는 등, 국제평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강화

- 국제평화유지활동 기여 분야를 병력 중심에서 다각화하여, 재정 및 장비 기여 활성화 등 선진국형으로 전환 추진

  * 한국, UN PKO 병력 기여 35위, 재정 기여 10위('20년 기준)

- ADMM-Plus 해양안보분과 공동의장국 수행('17~'20년) 성과 공유 및 타 분과 의장국 진출 등 기여 강화

- 한-캄, 한-베 등 PKO 협력 강화, 우리의 우수역량 전파

  * 베트남 장교 수탁교육('16년~), 캄보디아 장교 수탁교육('17년~)

○ 파병부대 국제평화유지활동 수행 및 성과 제고

- 파병부대 국제평화유지활동 지속 수행

• 남수단 한빛부대 : 재건지원 및 인도적 지원 활동 • 레바논 동명부대 : 정전 감시 및 인도적 지원 활동 •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 대해적작전 참여 및 우리선박 등의 안전 항해 지원 • UAE 아크부대 : UAE군 특수전부대 교육훈련 지원 및 연합훈련 실시

- 연합훈련 확대, 유사시 우리 국민·선박 등 보호 활동 수행, 한-UAE 국방협력 강화 등 파병부대 성과 제고

- 해외파병부대 첨단장비 보급 확대 및 효과적인 전문분야 교육 프로그램 확립을 통한 임무 수행 역량 강화

○ 파병 관련 발전과제 발굴 및 추진

- 「해파부대 운용지원 TF」 운영을 통한 해파부대 발전과제 상시 발굴 및 제도개선 노력 지속

  * '18. 1월 운영 개시(비상설), 분야별 수시 개최, 주기적 추진상황 점검

- 유엔 평화활동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여성 PKO 인력 확대 노력

  * 유엔 권장 PKO 인력 내 여성 비율 : 20%(한국, '20. 2월 현재 26%)

- 유엔 평화유지국(DPO), 임무단 등 참모·고위직 진출 노력

  *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장('12 ~ '14) 이후 한국군의 유엔 고위직 (대령급 이상) 진출 사례 전무

○ 안정적인 평화유지활동 여건 조성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 지원, 다국적군 및 국방교류협력 파병의 법률적 근거 마련

- 파병 성과 홍보를 강화, 파병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동영상, 현장견학, 시구, 사진전 등 홍보 수단·대상을 다각화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발굴하여 홍보

□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을 위한 대응체계 정립**

○ 「재외국민 보호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 등을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우발상황 시에도 체계적인 대응 가능성 확보
- 「재외국민 보호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외교부) 을 기반으로 위기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안보실, 외교부 등)

○ 우발상황 발생 시 군 자산을 적극 이용하여 재외국민 보호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 마련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美 '미국 우선주의' 와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정책 표방으로 세계 안보 및 경제 질서에 불확실성 증대
- 국제 안보정세의 변화 또는 국가별 국방외교활동 계획의 변경 및 상대국 국내 사정 등으로 계획사업 미이행 가능성 상존

○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체제 강화와 전력 증강을 통한 對中 압박과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정책으로 미 · 중 갈등 심화 가능성

○ 역내 안보 유동성 증가 및 국가 간 군사적 투명성과 신뢰 구축 요구 증대
- (중국) 미국과 영향력 확대 경쟁 下 역내 유리한 전략적 여건 조성을 위한 군사활동 확장
- (일본) 보수 우경화 정책, 개헌 추진, 자위대 임무 · 역할 강화, 미·일 동맹 강화

- (러시아) 대미관계 개선 및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 북한과의 경협 활성화 추진 등

○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국외 요인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외교적 협력을 동반한 적시 대응이 필요

- 남수단 무력충돌('16. 7월), 소말리아 해역 해적공격, 중동 지역 긴장 고조('20. 1월), 세계적 전염병 유행(Pandemic) 시 파병국(경유국)의 국경 폐쇄 조치('20. 3월) 등 예측이 어려운 외생적 돌발상황의 발생 위험 상존
- 의료수준이 낮은 파병지에서의 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주변국 및 유관부처 협조 없이 대처 불가능

○ ADMM-Plus, ARF 등 ASEAN 10개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적 위상 제고 노력

- 미·중 결쟁, 중·일 관계 악화 등 강대국 간 갈등 속에서 회원국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국익 극대화 추구

《 대응방안 》

○ 계획된 사업의 정상적 시행을 위해 정세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대·내외 관련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긴밀한 협조 유지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강구 및 대화협력의 관행 축적을 통한 신뢰 구축

○ 대응매뉴얼 발전,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우리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고 긴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ADMM-Plus, ARF 등 ASEAN 중심의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등 우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대 확보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국제사회에서 국익 중심의 국방외교활동 수행으로 국방교류협력 상대국 간 갈등 상황 발생으로 곤란한 상황 발생

○ 역내 국가들 간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경쟁과 갈등은 양자 간의 전략적 협력구도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국내외 여론에 민감하고,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
- 파병에 부정적인 시민단체의 반대로 다국적군 평화활동 및 국방교류협력 파병에 대한 근거 법률 제정의 지연 우려
-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연대, 파병에 대한 정치적 반대 등으로 인한 파견의 적시성 상실 우려

○ 권위주의 정권, 군부 영향력 강화에 따라 일부 ASEAN 국가(미얀마, 태국 등)에서는 사회 갈등요인 상존
-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진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자국 이익 추구를 위한 전략으로 활용
- 일부 친북성향 국가(미얀마, 베트남 등) 북한과의 군사협력 지속 의혹 및 인권문제 상존

《 **대응방안** 》

○ 관계가 불편한 국가간 국방외교 추진시 가급적 Low-Key로 추진하고, 상대국과 계속적 소통을 통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 주변국과 상호 군사적 신뢰 및 투명성 증진을 위한 교류분야 확대 추진
○ 다각적인 해외파견 성과 홍보를 통한 대국민 지지기반을 확보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파견 정책의 적시성 보장 추진
○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적시성 확보, 다각적 성과 홍보를 통한 대국민 지지기반 확보
○ 친북성향 국가 맞춤형 친한화를 통한 대북대응외교 강화
- 지속적인 친한화를 통해 낮은 단계 국방협력으로부터 포괄적인 협력으로 발전
○ 군부 위상이 높은 ASEAN 국가와 국방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협력 촉진

(4) 기타 (참고자료)

○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UN 홈페이지 (http://www.un.org)
○ 주재국 인터넷홈페이지 : 중국, 일본, 러시아, 다자협의체 등
○ JIDD 홈페이지 (http://www.jidd.org)
○ 헬리팩스 국제안보포럼 홈페이지 (http://www.halifaxtheforum.org)

전략목표 Ⅲ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혁신강군 건설

기 본 방 향

◇ 미래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강력히 추진

○ 우리 軍 주도의 연합·합동 지휘구조 개편 및 전투능력 발휘에 효율적인 국직·합동부대로 개편

○ 전방위 위협 대응 및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전력구조 개편 추진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의 투명성·효율성·개방성을 극대화

○ 사회여건 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장병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혁신

○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국방 全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 국방혁신을 구현

◇ 동원체계 개선 및 실질적 예비군 훈련으로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 동원위주부대의 임무수행 구비 등 동원즉응태세 확립을 통한 전방부대에 대한 동원지원체계 구축

○ 동원소요의 최적화 및 동원집행의 실효성 보장을 통한 전시 동원대비태세 확립

○ 과학화 예비군훈련 체계 정착 및 실전적 훈련으로 예비군 전투준비태세 완비

전략목표 3	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혁신강군 건설

(1) 주요 내용

□ 국방개혁 목표(강한군대 조기구현) 달성을 위한 군구조 개편 추진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 추진

- (육군) 병력 감축과 연계, 부대구조는 축소하되 작전 역량은 강화
- (해군)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능력 구비
- (공군)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을 강화
- (해병대) 다양한 임무수행, 입체고속상륙작전 능력 구비

○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및 군구조 발전정책 수립

-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능력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 지속 증강
- 2040년대 전방위 안보위협, 인구감소 현상, 과학기술 발전 등 도전적 안보환경에 대비하여 국방개혁 2.0 다음 단계의 장기 군구조 발전 정책 수립 및 제도화 추진

○ 국방운영 및 병영문화 개혁 과제 추진

-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인력운영체계 개선
- 국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개방형 운영체제로 전환
- 국민 눈높이의 인권·복지를 구현하여 사기 충만한 병영문화 정착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 첨단 ICT 국방 적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
- 초연결·초융합의 국방 인프라 조성으로 국방혁신 지속화 보장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무기체계 고도화·지능화로 미래전 대비

○ 50만 명으로 병력 감축 및 군조직 정예화

-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
- 병력은 감축되나, ’24년까지 전투부대 간부 보강, 군무원 증원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정예화
- 군 규모에 맞게 최상위 계급인 장군직위 슬림화·효율화

○ 국방개혁과 연계한 부대개편시설사업 적기추진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25년까지 여단급 이상 부대 군사시설의 통합 · 조정과 재배치

□ 예비전력 정예화

○ 동원지원 및 전시대비 연습지원 능력 강화

- 동원위주부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 등 동원즉응태세 확립을 통한 전방부대에 대한 동원지원체계 구축
  - • 동원지원체계 구축 지원능력 확보 및 개선 지속 추진
- 전시대비 연습계획 및 이행을 통한 준비태세 역량강화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 전작권 전환 대비 전시지휘소(B-1) 시설 개선

○ 동원소요의 최적화 및 동원집행의 실효성 보장

- 국방환경변화를 고려한 적정규모 예비군 편성 추진
  - * 동원예비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재판단하고 예비군 편성을 조정
- 물자동원 소요제기 및 운영체제 발전
  - * 소요부대 임무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배분계획을 수립
- 실제 동원훈련 실시를 통한 전시 동원계획 점검
  - *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전시계획으로 환류
- 동원능력분석모델을 활용한 연습 · 훈련 지원 및 정책 검증

* 동원능력분석모델 모의논리 고도화를 통한 모델 신뢰도 제고

○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및 발전

- 성과위주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으로 예비군훈련 성과 제고
- 과학화된 미래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을 통한 동원준비태세 완비 여건 보장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table>
<tr><th rowspan="2">성과지표</th><th colspan="5">실적</th><th rowspan="2">목표치</th><th rowspan="2">'24년 목표치 산출근거</th><th rowspan="2">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th><th rowspan="2">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th></tr>
<tr><th>'15</th><th>'16</th><th>'17</th><th>'18</th><th>'19</th><th>'24</th></tr>
<tr><td>국방개혁 2.0 추진율</td><td>-</td><td>-</td><td>-</td><td>34</td><td>55</td><td>93%</td><td>
국방개혁 2.0 세부추진 과제 추진율 (60%)
• 국방개혁 2.0 과제(42개)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수립된 세부추진 과제 별 달성목표연도를 설정하여 국방개혁 2.0을 강력하게 추진.
• 국방개혁 2.0 세부추진과제 대상 건수는 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추진 가능한 과제 등을 제외한 64건임.
<연도별 목표달성 세부추진과제 건수>
<table>
<tr><th>'18</th><th>'19</th><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 이후</th><th>총계</th></tr>
<tr><td>3</td><td>12</td><td>16</td><td>6</td><td>11</td><td>4</td><td>4</td><td>8</td><td>64</td></tr>
</table>
<연도별 누적 목표달성률>
<table>
<tr><th>'20</th><th>'21</th><th>'22</th><th>'23</th><th>'24</th><th>'25년 이후</th></tr>
<tr><td>48%</td><td>58%</td><td>75%</td><td>81%</td><td>88%</td><td>100%</td></tr>
</table>
국방개혁 제도개선 추진율 (40%)
• 법령 제·개정 소요를 고려하여 연도별 제·개정안 작성률 및 입법예고율, 국무회의 상정률을 가중치에 따라 합산하여 목표치 산정
• '20년은 제·개정안 작성 소요(74건)대비 누적 55건 작성을 목표치로 설정
</td><td>{(연도별 국방개혁 2.0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완료건수)÷ (국방개혁 2.0 과제별 세부 추진 과제 대상 건수)}× 60%
+
{(법령 제·개정 안 작성수 ÷ 법령 제·개정 소요) × 40% +
(작성안 입법예고 건수 ÷ 제·개정안 작성 수) × 30% +
(국무회의 상정 건수 ÷ 입법예고 건수) × 30% }
× 40%</td><td>• 추진점검회의록
• 현장확인 결과
• 과제 추진관련 업무보고 등
• 법령 제·개정안
-제·개정안 작성
-입법예고
-차관/국무회의 상정
-국회제출(법률)
-공포(시행령)</td></tr>
</table>

							• 제·개정안 작성 누적목표 건수(55건)대비 입법예고 55건을 목표치로 설정 • 입법예고 누적목표건수 (55건)대비 국무회의에 누적55건 상정을 목표치로 설정 <연도별 제도개선 누적목표율> 구 분 '20 '21 '22 추진율 합계 90% 98% 100% 제·개정안 작성률 30% 38% 40% 입법예고율 30% 30% 30% 국무회의상정률 30% 30% 30% <18. '19년도 실적> 구 분 '18 '19 추진율 합계 72% 79.5% 제·개정안 작성률 12% 22.5% 입법예고율 30% 30% 국무회의상정률 30% 27%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Ⅲ-1. 군구조 개편 추진율	신규	신규	82%	84%	89%
Ⅲ-2.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율	86%	88%	90%	92%	93%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안보위협의 불확실성 증가와 주변국 간 안보분야에서 잠재적 위협 증대,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두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 기술의 발달로 국방 분야 변화와 혁신 요구

○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상비전력 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적정예산 확보 제한

- 국가 재정여건 제한에 따른 예비전력 무기 현대화 및 예비군 훈련 실비 증액 곤란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애로 및 민원 증가 우려

《 대응 방안 》

○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가능한 군 구조개혁 추진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국방대응체계 발전

○ 과학기술을 활용한 전력체계 혁신 등 4차 산업혁명 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공감대 확산, 국회 및 언론 등 홍보 지속 추진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전력 소요 결정 및 장기 군구조 발전 정책 구상 시 유관기관 및 각 군 간 전력건설 방향, 전력소요 반영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가능성

○ 국방개혁 2.0에 따른 강원 접경지역의 부대 해체 및 재배치와 관련,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부대개편에 반대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움직임 가시화

○ 예비군훈련장 통합 및 신축에 따른 주민 갈등 및 관련 부처 간 이견 상존

《 대응 방안 》

○ 전력소요 결정 및 전력화, 장기 군구조 발전 추진 전 과정에서 업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을 강화

○ 「상생발전협의회」등 정례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접경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건설 추진

○ 예비군 정예화 필요성 설득 및 관련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

(4) 기타 (참고자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9호, ’17. 6. 22.)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제15046호, ’17. 11. 28.)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14호, ’18. 9. 1.)

○ 국방개혁 추진 훈령 (국방부훈령 제2116호, ’18. 1. 8.)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국방부훈령 제2096호, ’17.12.19.)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19. 1. 9.)

○ ‘19 ~ ’33 예비전력 정책서 (‘19. 6. 12.)

○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국방개혁 2.0

성과목표 III-1	국방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군구조 개편 /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국방개혁을 통한 강한군대 조기구현**

추진방향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개편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및 발전정책 수립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50만명 병력감축 및 군조직 정예화	국방개혁과 연계한 부대개편 시설사업 적기추진
핵심활동	· 각 군 부대구조 개편 추진 · 국직 / 합동 부대 효율화	· 전력구조 개편 추진 · 장기 군구조 발전정책 수립	·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국방 운영 · 초연결·초융합 국방인프라 조성 · 무기체계 고도화·지능화	· 상비병력 감축 · 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정예화 · 장군직위 슬림화·효율화	· 미래 부대 구조 개편 시설 및 장비 적기 확보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 추진

○ 북한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합동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입체기동작전 및 핵·WMD 대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개편

- (육군)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 (해군) 수상·수중·항공 입체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 (공군)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 (해병대)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

○ 국직·합동부대 개편으로 부대별 임무수행의 효과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

□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및 군구조 발전정책 수립

○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로 개편 가속화 및 미래전을 대비한 핵심기술 능력 발전

○ 2040년대 인구감소 등 도전적인 안보위협에 대비한「국방개혁 2.0」에 후속하는 '장기 군구조 발전' 정책 수립 및 제도화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 첨단 ICT 국방 적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 실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 '총생애주기(Total Life Cycle)' 관리 개념을 국방운영의 핵심 요소인 장병(입영~전역)과 국방자원(소요~폐기)에 적용
- 장병들의 교육훈련 강화 및 안전·복지 증진, 국방자원(장비·물자·시설 등) 관리 효율성 극대화

○ 초연결·초융합의 국방 인프라 조성으로 국방혁신 지속화 보장
-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을 통한 효율적 국방자원 활용 보장
- 사이버 공간 우위확보를 통한 체계 보안성 강화 및 보장
- 정책·제도 혁신을 통한 스마트 국방혁신 여건 보장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무기체계 고도화·지능화로 미래전 대비
- 무기체계 핵심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전력체계 건설 기반 강화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 50만 명으로 병력 감축 및 군조직 정예화

○ 상비병력 50만 명으로 감축(’20년 말 55.5만→’22년 말 50만)

○ 병력은 감축되나, ’24년까지 전투부대 간부 보강(+3,534명), 군무원 증원(+12,506명)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정예화
- (간부 보강) ’20년 1,229명, ’21년 877명, ’22~’24년 1,428명
- (군무원 증원) ’20년 3,273명, ’21년 5,119명, ’22~’24년 4,114명

○ 줄어든 군 규모에 맞게 최상위 계급인 장군직위 슬림화·효율화 (’22년까지 장군정원 45명 감축, ’20년 -15명, ’21년 -15명, ’22년 -15명)

□ 국방개혁과 연계한 부대개편시설사업 적기추진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에 따라 ’25년까지 여단급 이상 55개 부대 군사시설의 통합·조정과 재배치 추진
- 기존 2개 이상 지역에 위치한 부대를 지역별로 한 곳으로 통합·조정 및 필요 시설의 적기 건설로 개편 부대의 작전 수행 보장

(2) 세부 추진계획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부대구조로 개편 추진

○ 북한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위협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합동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입체기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 구조로 개편

○ 육군은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신속결정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 전방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신속대응사단 창설 (’21년)
-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향토사단을 지역방위사단으로 개편 (’20~‘23년)
- 드론 전투체계와 워리어플랫폼 도입 등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

○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 항공전단은 전력증강 및 임무확대와 연계하여 항공사령부로 개편 (’22년)
- 기동전단은 이지스구축함 전력화와 연계하여 기동함대사령부 개편 (‘25년)

○ 공군은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

- 감시정찰능력 강화를 위해 무인항공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 창설 (‘20년)
- 중·장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감시통제비행전대, 전자전전대 창설추진

○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한 공지기동형 부대구조로 개편

- 입체고속상륙작전, 지상작전, 국지도발대비작전, 전략도서 증원, 인도적 지원작전 등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한 해병항공단 창설(‘21년)
-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작전이 가능하도록 정보·기동·화력이 보강된 상륙사단으로 재편 추진

○ 국직·합동부대 개편으로 부대별 임무 수행의 효과성, 조직과 예산의 효율성 제고

- 불필요한 행정, 지원조직을 감편하고, 인력구조를 현역 일변도에서 민간인력을 확대

- 부대의 기능을 통합하거나, 그 기능을 각 군으로 전환시켜 군별 전문성과 특성을 강화하도록 개편 추진

□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력구조 개편 및 군구조 발전정책 수립

○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은 물론, 국가 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

- 우리 軍 주도의 연합방위 능력 보강 및 핵·WMD 위협대응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지속 보강
- 우리 軍 감시정찰 및 타격 능력 확대를 위한 전력 확보
- 테러, 재해 재난 등 다양한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능력 보강을 위해 전력 확보 추진
-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4차 산업과 연계된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투자 비중 안정적 유지
- 우주, 사이버, 초연결, 초지능 등의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전력 확보 추진

○ 미래 안보환경을 대비한 장기 군구조 발전정책 결정 수립 및 제도화

- 2040년대 전방위 안보위협, 인구감소 현상, 과학기술 발전 등 도전적 미래 안보환경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장기 군구조 발전 구상 추진

1단계 ('20년)	2단계 ('21년)	3단계 ('22년)
기초연구	**정책방안 수립**	**제도화**
① 연구기관 선정/자체연구 (KIDA, 합참, 민간 연구기관 등) ② **기초분석서 작성** ③ 장기 군구조 발전 TF 편성(안) 수립	① **장기 군구조 발전 TF 운영** ② 세부 과제별 대안 수립 및 심층 분석 ③ **장기 군구조 발전 정책서 작성**	①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 기본계획 등 기획문서 반영 ② 법률 제·개정 및 규정화

- 도전적 미래 안보환경을 반영한 국방의 지향점 설정
- 지휘·부대, 병력, 전력구조 등 군구조 대안 분석

- 세부 과제별 대안 수립 및 심층 분석을 통해 장기 군구조 발전 정책 작성 및 제공
- 국방기본정책서, 국방개혁기본계획 등 기획문서 반영 및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제도화 추진

□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

○ 첨단 ICT 국방 적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선진 국방운영 실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 LVC 기반의 실전형 워리어 및 부대 육성
  * VR/AR, 시뮬레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LVC 기반의 실감형 과학화 훈련체계 구축
  * 실기동 등 현장훈련과 병행하여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 '상시 실전형 훈련' 추진으로 부대 및 개인 전투력 향상
- Big Data를 활용한 장병 삶의 질 개선
  * 빅데이터·AI. 등 첨단기술을 장병 복지와 생활에 밀접한 안전, 의료, 급식·피복 등에 적용
- Life Cycle 국방자원 관리를 통한 효율성 향상
  * ICBM과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 군수품의 과학적 총수명주기 관리로 예산 효율화 및 장비가동률 향상
  * 3D 지형정보·BIM 등을 활용하여 시설자원의 생애주기 관리
- 주요 기술분야 민관군 상생 발전
  * 4차 산업혁명 관련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
  * 민간 우수기술 도입 및 군 자체 기술개발로 전투준비태세 강화

○ 초연결·초융합의 국방 인프라 조성으로 국방혁신 지속화 보장

- 초연결 네트워크 구현을 통한 효율적 국방자원 활용
  * 모든 국방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 국방 클라우드, 국방 모바일, 지능형 스마트 부대 등 구축
- 사이버 공간 우위확보를 통한 체계 보안성 강화 및 보장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사이버 공간 우위 확보

- 정책·제도 혁신을 통한 스마트 국방혁신 여건 보장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기 적용을 위한 무선 암호정책 개선
  * 국방 AI 발전 계획 수립 등 인공지는 적용환경 구축

○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무기체계 고도화·지능화로 미래전 대비

- 무기체계 핵심선도기술 확보를 통한 전력체계 건설 기반 강화
  * 무기체계 소요에 기반하지 않는 도전·혁신적인 국방R&D 수행을 위해 '미래도전기술개발' 제도 신설 및 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을 적용, 미래 합동작전 개념 구현할 수 있는 기술주도형 전력 증강 추진
  * 단계적 방향 설정에 따른 핵심전력 선정 및 중점 관리

□ 50만 명으로 병력 감축 및 군조직 정예화

○ 청년인구 감소로 병역 가용자원이 급격히 감축되는 환경을 고려, 상비병력을 육군 병 위주로 '22년 까지 50만 명으로 감축

- 상비병력 감축 : '20년 55.5만 명 → '22년 50만 명

○ 병력은 감축되는 환경에서도 강한 군대를 구현하기 위해, 군 구조를 기술집약형으로 정예화하면서, 이에 맞도록 숙련된 간부를 전투부대에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군무원)을 적극 활용

- (간부 보강) '20년 1,229명, '21년 877명, '22 ~ '24년 1,428명
- (군무원 증원) '20년 3,273명, '21년 5,119명, '22 ~ '24년 4,114명

○ 병력이 감축되는 군 규모에 맞게 군의 최상위 계급인 장군직위도 슬림화·효율화 추진 (총 76개 감축, '18 ~ '19년 31개 감축 완료)

- '22년까지 잔여 장군정원 45명 감축, '20 ~ '22년까지 매년 15명

□ 국방개혁과 연계한 부대개편시설사업 적기추진

○ 국방개혁2.0에 따른 부대개편 3~6차 시설사업 추진 ('20~'21년)

- 미확정된 개편소요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집행 여건을 검토하여 예산투입 계획 수립 후 중기계획 반영
- 부대개편 후 미활용 군용지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소요를 고려한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 부대개편 간 발생이 예상되는 지자체와의 갈등은 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여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 뒷받침

○ 국방개혁2.0에 따른 부대개편 최종 7~8차 시설사업 추진 ('22~'25년)

- 전방 GOP 사단을 대상(7개 사단 개편, 2개 사단 해체)으로 부대개편 시설사업이 집중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편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안보위협의 불확실성 증가 및 감염병 확산 등 안보위협 다변화

○ 북 핵·미사일 위협 지속, 잠재적·사이버·비군사적 위협 증가 등 불확실한 미래 안보위협에 대한 전력체계 개선 필요

○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 변화에 대비한 핵심 기술 개발 및 전장 영역 확대에 대비한 군구조 개선 요구

○ 비전통 위협 증대 등에 따라 인력 증원소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일자리 증원에 대한 여·야간 대립으로 인력 확보 불확실성 상존

《 대응 방안 》

○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국방대응체계 발전

○ 핵·WMD 대응능력 등 핵심군사능력 지속 확보를 통해 국방개혁2.0 전력구조 개편 조기 달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첨단 기술의 효율적 국방 적용을 위해 체계적 사업관리 및 가시적 성과 창출 여건 마련

○ 인력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논리 개발 및 적극적인 기재부·국회 사업설명 등을 통해 소요 인력 확보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각 군 부대구조 개편에 따른 주둔지 지역주민 이해충돌 가능

○ 전력 소요 결정 및 장기 군구조 발전 정책 구상 시 유관기관 및 각 군 간 전력건설 방향, 전력소요 반영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 가능성

○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체계적 국방 적용 보장을 위한 제도·정책 여건 조성 필요

○ 상비병력 및 장군정원 감축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각 군의 이해관계 상충 가능성 상존

○ 국방개혁 2.0에 따른 강원 접경지역의 부대 해체 및 재배치와 관련,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부대개편에 반대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움직임 가시화

《 대응 방안 》

○ 전력소요 결정 및 전력화, 장기 군구조 발전 추진 전 과정에서 업무 유관기관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을 강화

○ 국방개혁 홍보를 통한 군 구조 개편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대

○ 무선 암호정책 개선, 국방 AI 발전계획 수립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국방 적용 성과 확대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추진

○ 상비병력 및 장군정원 감축계획 이행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토의 등을 통해 안정적 갈등관리 추진

○ 상생발전협의회 등 정례적인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접경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건설 추진

(4) 기타 (참고자료)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9호, ’17. 6. 22.)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제15046호, ’17. 11. 28.)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114호, ’18. 9. 1.)

○ 국방개혁 추진 훈령 (국방부훈령 제2116호, ’18. 1. 8.)

○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국방부훈령 제2096호, ’17.12.19.)

○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19. 1. 9.)

○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국방개혁2.0

성과목표 III-2	예비전력 정예화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 **상비군 수준의 예비전력 정예화**

추 진 방 향	동원전력으로 상비전력에 준한 전투력 창출	동원소요의 최적화 및 동원집행의 실효성 보장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및 발전
핵 심 활 동	· 동원지원체계 구축 지원능력 확보 · 전시대비연습 준비태세 역량 강화 · 전작권 전환 대비 전시지휘소 시설 개선	· 병력/물자 동원계획 수립 및 발전 · 전시 국방동원 집행계획 점검 및 보완·개선 ·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영 및 활용성 제고	· 실전적 예비군훈련 시행 · 예비군훈련 여건 개선 · 예비군 제도 개선 및 국민편익 증진

□ 동원지원 및 전시대비연습지원 능력 강화

○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의 임무수행능력 구비 등 동원즉응태세 확립을 통한 전방부대에 대한 동원지원체계 구축

- 동원지원체계 구축 지원능력 확보 및 개선 지속 추진

○ 전시대비연습 계획 및 이행을 통한 준비태세 역량 강화 및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 전작권 전환 대비 전시지휘소(B-1) 시설 개선

□ 동원소요의 최적화 및 동원집행의 실효성 보장

○ 국방환경변화를 고려한 적정규모 예비군 편성 추진

* 동원예비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재판단하고 예비군 편성을 조정

○ 물자동원 소요제기 및 운영체제 발전

* 소요부대 임무수행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배분계획을 수립

○ 실제 동원훈련 실시를 통한 전시 동원계획 점검

*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전시계획으로 환류

○ 동원능력분석모델을 활용한 연습·훈련 지원 및 정책 검증

* 동원능력분석모델 모의논리 고도화를 통한 모델 신뢰도 제고

□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및 발전

○ 성과위주 예비군 훈련제도 개선으로 예비군훈련 성과 제고

○ 과학화된 미래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을 통한 동원준비태세 완비 여건 보장

(2) 세부 추진계획

□ 동원지원 및 전시대비연습 지원 능력 강화

○ 동원지원체계 구축 지원능력 확보 및 개선

- 동원위주부대 전력보강 및 신형물자 확보 지속 추진 : ~'24년
- 해군 예비전력관리 전대 창설 : ~ '23년

○ 전시대비연습 계획과 이행을 통한 준비태세 역량 강화 및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 전작권전환 이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방안 수립 : ~'22년
- 한국군 주도 전쟁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연습체계 정착 : ~'24년

○ 전작권 전환 대비 전시지휘소 시설 개선

- 전시지휘소 시설 공사 완료 : ’21. 6월
- 한·미 연합 전시지휘소 역할 수행 : ‘22년 이후~

□ 동원소요의 최적화 및 동원집행의 실효성 보장

○ 국방환경변화를 고려한 적정규모 예비군 편성 추진

- 전시 병력동원 소요 재판단 : ’20. 10월
- 병력동원 지정방안 개선, 연차별 임무 조정 : ’21. 下

○ 물자동원 소요제기 및 운영체제 발전

- 동원소요 최적화를 위한 정부 합동 소요심의 : 매년 (4~7월)
- 관·군 합동토의, 동원집행 모의연습 시행 : 매년
- 국방자원동원 운영계획(산업·수송·건설·정보통신) 수립 : 매년

  * 소요부대 임무수행 여건을 고려한 자원배분 / 관리

○ 실제 동원훈련 실시를 통한 전시 동원계획 점검

- 동원절차 숙달 및 동원준비태세 점검을 위한 충무훈련 : 매년
- 각 군 및 국직부대 대상 동원운영실태 점검 : 매년

○ 동원능력분석모델을 활용한 연습·훈련 지원 및 정책 검증

- 모의집행 경험 축적 및 연습·훈련 지원 : 매년

  * 다양한 전장환경, 각급 부대를 대상으로 연 12회 이상의 동원모의집행 연습·훈련에 동원율을 제공하여 실전적 연습·훈련 지원

- 동원능력분석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용역 : ’20~’21

  * 전시동원능력 모의집행결과 전문분석 연구(’20), 동원능력분석 모의논리 고도화 연구(’21)

- 동원능력분석모델 성능개량 추진 : ’24～

  * 동원능력분석 고도화를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22)

□ 예비군 훈련체계 개선 및 발전

○ 과학화된 미래 예비군 훈련체계 발전

* '20년(9개소), '21년(4개소), '22년(10개소), '23년(4개소), '24년(8개소)

○ 예비군용 통신장비 현대화로 관·군·경 통합통신체계 구축

- 노후 통신장비를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이 가능토록 PS-LTE(국가재난안전통신망) 체계로 '21년까지 개선

↳ 영상, 고해상도 사진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이용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신 기술

○ 예비군훈련 보상비 현실화 추진(최저임금 50%수준) : ~'22년

- 예비군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지속 추진

* '22년까지 현역병 봉급과 연계하여 '17년 최저임금(6,470원/h)의 50%까지 인상(동원 9.1만원, 지역 2.6만원)

* 동원훈련 보상비 : '18년(1.6만원) ⇨ '19년(3.2만원) ⇨ '20년(4.2만원) ⇨ '22년(9.1만원)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국방개혁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한 상비전력 대비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적정예산 확보 제한

- 국가 재정여건 제한에 따른 예비전력 무기 현대화 및 예비군 훈련 실비 증액 곤란으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애로 및 민원 증가 우려

* '20년 국방비 대비 예비전력 예산 : 0.4%(50.1조 중 2,067억원)

《 대응 방안 》

○ 예비전력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국회 및 언론 등 홍보 지속 추진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예비군훈련장 통합 및 신축에 따른 주민 갈등 및 관련 부처 간 이견 상존

《 대응 방안 》

○ 예비군 정예화 필요성 설득 및 관련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

(4) 기타 (참고자료)

○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

○ ’19～’33 예비전력 정책서 (’19. 6. 12.)

○ 홈페이지 : www.yebigun1.mil.kr

전략목표 Ⅳ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기 본 방 향

◇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 대내외 여건 및 국방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국방자산일치화율을 제고함으로써 공정·투명한 국방운영체계 마련

○ 효율적 군수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혁신을 지속하고, 상용화 확대 및 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혁신제품의 군 사용여건을 마련하며 기업 상생 도모

○ 육군훈련소 생활관 등 기본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적정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며 민간인력을 확대하고 스마트 기술 적용 추진

◇ 안보환경변화와 연계한 효과적인 국방인사정책

○ 군사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체계 발전 및 군무원 전문성 제고

○ 여군 비중 확대 등 안정적인 인력 획득 및 운영

○ 실질적인 국방 문민화 달성

◇ 4차 산업혁명의 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달성

○ ICT 신기술의 국방 융합 적용 확대를 통해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능력 강화

○ 초연결·초융합·초지능 국방 정보화환경 구축을 위한 모바일, 빅데이터·AI 등 정보통신기술정책 정립, 신기술 적용 로드맵 수립 및 개념검증 수행

○ 전군 정보시스템 통·폐합, 이전·이관 등을 통해 국방개혁 2.0의 효율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화 기반 마련

◇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

○ 무기체계 획득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및 획득 관련 협업체계 강화

○ 국방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활동을 통한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 객관적 · 과학적인 전력소요 검증과 시험평가를 통한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 군 공항 이전 및 효율적인 군사시설 운영 및 관리

○ 군공항 이전, 무단점유 사·공유지 개선 및 환경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군사시설 및 토지의 합리적 운영 및 처분 시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

전략목표 4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운영체계 확립

(1) 주요 내용

□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 국방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국방자산 일치화율 향상으로 투명한 국방운영체계 확립

○ 첨단 군수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군수품 상용화 및 중소기업 제품·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통한 혁신 선도

○ 병영생활관, 취사식당 및 급수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장병 복지를 향상시키고 적정 유지보수비를 확보 노후화 가속 방지

□ 안보환경변화와 연계한 효과적인 국방인사정책

○ 미래안보환경에 적합한 인사·인력운영체계 개선과 우수군무원 획득 및 전문성 강화 시스템 구축

○ 국방부 문민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여군 비중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인력 확보

□ 4차 산업혁명의 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달성

○ 첨단 ICT 기술과 국방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국방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범부처 ICT 융합 및 R&D 협력을 확대

○ 국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발전시켜 국방환경변화에 대비

○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을 적용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임무수행능력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

○ 정보화 기반체계 조성,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 마련

○ 국방 R&D 효율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 등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방산수출 기반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으로 협력·지원

○ 민·관·군 합동 소요검증위원회, 무기체계 시험평가 등을 통해 소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

□ 군 공항 이전 및 효율적인 군사시설 운영 및 관리

○ 군공항 이전, 무단점유 사·공유지 개선 및 환경복원,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군사시설 및 토지의 합리적 운영 및 처분 시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공정·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도모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전투장비 가동률				신규	100 %	100%	- '24년 목표치(100%)는 각 항목별 계획된 목표를 매년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함. - 전시 안정적인 장비가동률 정도를 평가하여, **군수지원 전반의 운영 효율성을 평가** • 장비별 목표 가동률 : 지상 90% / 함정 65% / 항공 75% * 목표 가동률 산출 근거 : 전투준비태세 평가업무훈령 (국방부 훈령 제2353호, '19.12..5)	{(지상장비 실제가동률/ 목표가동률) ×100 + (함정장비 실제가동률/ 목표가동률) × 100 + (항공장비 실제가동률/ 목표가동률) ×100 } ÷ 3	각 군 장비정비 정보체계 장비 가동률 현황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Ⅳ-1. 국방예산(전력운영비) 집행률(30%)	96.2%	96.7%	96.5%	96.5%	96.5%
국방예산 확보율(30%)	102.1%	102.4%	102.1%	102.2%	102.2%
적정 유지보수비 확보율(40%)	86%	93%	100%	100%	100%
Ⅳ-2. 우수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 및 인사관리 (40%)	신규	신규	100%	100%	100%
군무원 채용률 향상 (30%)	85.8%	71.8%	80%	82.5%	85%
간부 여군비율 (30%)	6.2%	6.8%	7.4%	8.0%	8.8%
Ⅳ-3. 국방정보화 환경 만족도	69.1점	72.3점	73점	73.1점	73.3점
Ⅳ-4. 합리적 의사결정 및 협업체계 기반 구축 이행 목표 추진율(50%)	-	90%	90%	90%	90%
국방부 차원의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추진율(50%)	-	-	97.6%	98.0%	98.4%
Ⅳ-5. 군과 주민의 상생을 위한 재산권 보장률	-	신규	80%	80.2%	80.4%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경기부진으로 조기집행 및 이월·불용 최소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경기부양이 시급하여 국방비 우선순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안정적 예산 확보가 어려운 데 반해, 군수 인력 감축은 불가피

○ 낙후된 군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민간 중심으로 시행되던 내진보강·안전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움직임 확대

○ 출생률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우수인력의 안정적 획득 및 운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필요

○ 안보환경의 초불확실성 증대, 산업혁명시대 전쟁 양상의 대변혁에 대해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필요

○ 글로벌 방산수출 시장 경쟁 심화, 전력소요검증 및 시험평가의 신뢰성 제고 요구

○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군공항 이전 및 시설업무에 대해 정책기획 단계부터 다양한 요구가 증가하였음

《 대응 방안 》

○ 주기적 집행점검단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부진사업 적시 조치
○ 재정여건과 국방분야 정책적 요구를 모두 고려한 적정 예산 수준을 결정하여 기재부·국회 상대로 이를 적극 설득
○ 군인의 직업 안정성 제고 및 여군 비중 확대 등 종합적 군 인력운영 개선방안 지속적 검토
○ 타부처와 적극 협업을 통한 국방 ICT융합 R&D과제의 기술개발, 초연결·초융합·초지능 국방정보환경 구축을 위한 국방의 대응전략 수립
○ 국방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소요검증과 시험평가 추진간 민간 전문가 적극 참여를 통해 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강화
○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소통을 지속하고 참여를 통해 공감대 형성 필요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이월·불용 발생 불가피를 이유로 한 사업관리 소홀과 군 책임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적정예산 및 우선순위에 대한 각 군·부서·재정당국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군수품 조달 관련 군·기업·타 부처 등 기관 간 입장 차 존재

○ 해체·이전 예정인 노후 병영시설 사용에 대한 불만

○ 높은 민간의 기술 수준에 비해 군 요구에 적합한 기술획득과 국방 적용에는 애로사항 존재

○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규제 시 국회 지자체 등 외부와 군 내부의 시각 차이 존재, 국민의 다양한 요구가 상충

《 대응 방안 》

○ 예산 편성 시 결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집행점검 활동을 통해 성과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

○ 충분한 설명 기회 제공으로 적정 재원 규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간 약정과 협업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품 조달 기반 조성

○ 해체·이전 예정부대 지원방안 수립·시행

○ 과기부 협업을 통해 민·군 협력이 가능한 R&D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군에 적용, 확산 가능토록 국방실험사업과 연계하는 데 중점

○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갈등 확산을 예방하고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개선, 민원현장 방문 등의 노력 지속

(4) 기타 (참고자료)

○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국방백서

성과목표 Ⅳ-1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 · 운영**

추진방향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용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국방 군수운영 효율화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효율화
핵심활동	• 조기집행 달성 및 집행률 제고 • 국방자산일치화율 향상	• 국방예산 확보 • 세출효율화 • 국방중기계획을 토대로 예산편성	• 군수혁신과제추진 • 린 6시그마 사업 •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 구매 • 군수품 상용화	• 병영생활관 개선 • 시설물 안전등급 지정 관리

□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영

○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더불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며, 군 책임운영기관의 효과적 관리를 통해 국방운영의 효율성 제고

○ 국방자산일치화율 향상을 통해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투명한 국방운영체계 확립에 기여

□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 국정과제 이행 및 국방개혁 2.0 추진 등을 위해 국방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확보 추진

○ 국방중기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향후 5년간의 국방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가용재원 판단 및 합리적 배분 노력

□ 국방 군수운영 효율화

○ 데이터에 기반한 군수운영, 선진기법 활용, 현대화 등 군수혁신을 통해 첨단 군수지원체계를 구축

○ 린 6시그마 등 군수분야에 경영효율화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군 내 경영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예산효율화에 기여

○ 군수품 상용화 확대 및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를 통해 군에 민간 우수제품을 도입하고, 군이 혁신제품의 테스트베드(Test Bed)*로서 기능하여 국방분야가 혁신을 선도

*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성능 및 효과를 시험할 수 있는 환경 혹은 시스템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효율화

○ 국방개혁 기본계획과 연계한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장병 복무여건 조성

○ 장병들의 기초적인 생활 환경과 관련된 취사식당 및 급수시설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장병 복지 및 만족도 향상 도모

○ 군이 보유한 11만여 동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에 적정한 유지 보수비를 확보하여 사용연수 확대 및 노후화 가속 방지

(2) 세부 추진계획

□ 국방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운용

○ 재정집행 점검을 통해 합리적 배분 및 효율적 예산 운영

- 기재부 주관 재정집행점검과 국방예산 집행점검단 활동을 통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진사업 대책을 마련
- 정부 재정운영 기조에 발맞추어 소비 · 투자비목 예산을 조기 · 적기 집행하고 합리적 배분 등 효율적 운용으로 집행률 향상

○ 국방자산일치화율 제고로 투명한 국방운영체계 확립에 기여

- 군수체계와 재정체계간 거래정보 상호공유 및 교차모니터링 가능한 구조를 제시하여 시스템적 자산일치화 방안 마련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정례화 및 재무결산 담당 전문관제 도입 요구
- 업무개선 방안 마련, 감사원 재무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점검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원관리부대 현장지도 방문 추진(연 2회 실시)

□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 **(예산획득)**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방개혁 추진 및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국방재원 확보

- 세계정세 및 안보환경, 정부 재정여건 등 예산편성 환경 분석
- 국방분야 정책적 요구를 적극 구현하되, 집행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재원배분 등 예산 최적화 노력 병행
- 적정 국방비 확보 필요성에 대한 대외 공감대 형성 및 홍보 추진

○ **(중기계획)** 국방중기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중장기 적정 소요를 판단하여 합리적 배분계획 마련

- 중기간 안보여건 및 재정운용 추이 등을 분석하여 재원 중점 배분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 향후 5년간의 국방운영 청사진 설계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국방비 산출을 위하여 국방개혁 추진 비용을 평가하고 합리적 국방비 배분 방안 연구
- 수립된 국방중기계획을 바탕으로 국방 분야 국가재정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고 국무위원 참여 재정전략회의 준비 및 대응

□ 국방 군수운영의 효율화

○ **(군수혁신)** '19~'33 국방군수정책서 상의 군수정책 비전 및 목표와 6대 정책방향을 효과적으로 구현

※ '19~'33 국방군수정책서 상 비전·목표·정책방향

비 전	고객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선진군수
목 표	• 첨단 군수지원체계 구축 •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수운영체계 확립
정책방향	Ⅰ. 전·평시 군수지원능력 확충 Ⅱ. 총수명주기관리 정착 Ⅲ. 민·관·군 협업체계 구축 Ⅳ. 국제군수협력 강화 Ⅴ. 장병복지 향상 및 생활여건 질적 개선 Ⅵ. 재난·안전 관리능력 강화

- 경험과 직관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군수운영(소요제기, 조달, 보급, 정비, 폐기)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혁신기회 창출

  *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군수 빅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빅데이터·클라우드 기반의 군수운영 효율화 추진(급식·수리부속수요예측·부품단종관리 등)

- 사용자·수요자 등 고객 관점의 군수혁신 추진
-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국방혁신과 연계하여 군수혁신 추진

- 각 군의 자율적인 혁신활동을 강화하고, 외부의 객관적인 성과 지표 검증과 성과평가로 성과지향 혁신활동

○ **(중소기업제품 등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를 통해 군에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을 도입

* 20년 추진 목표

- **중소기업제품** : 당해 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 -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신제품, 신기술 등 18종) : 당해 연도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 **(군수품 상용화)** 상용전환 대상품목 발굴, 군 시범 사용 적합품목 조달 확대 등을 통한 군수품 상용화 확대 추진

* 예산 절감 목표

'17년	'18년	'19년	'20년
		▶	
191억	216.5억	218.1억	230억

-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를 통해 기업은 혁신제품을 군에 제안하고, 군은 이를 시범 사용할 수 있는 경로 활성화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군 시범사용 적합품목에 대한 군 조달 절차 간소화 추진
- 상용화 확대를 위한 軍 기술지원 상시 지원체계 구축

○ **(린 6시그마 사업)** 경영효율화 기법인 린 6시그마 기법을 활용, 군수분야 전반의 경영혁신 및 예산 효율화 성과 도출

-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각 군 군수분야 경영효율화 추진
- 군 내부 린 6시그마 전문인력의 활용 확대 및 역량 강화, 군수분야 경영혁신활동 확산
- 4차 산업혁명 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스마트 팩토리 등)과 연계하여 과제를 추진하고, 관련 교육과정 확대

- 린 6시그마 기법에 新혁신기법*을 결합, 성과제고

新혁신기법(사례)	린 6시그마와의 결합 방안 및 효과
프로세스 마이닝	• 린 6시그마 문제 정의 시 업무수행 기록 데이터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시각화 • 기존 기법으로 발견이 어려운 병목 포착, 획기적 개선 가능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	• 린 6시그마 개선안 도출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기법 • 반복적·규칙적 업무 프로세스를 S/W로봇으로 대체, 행정업무 비효율 획기적 개선 가능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효율화

○ 「국방개혁 2.0」을 반영한 병영생활관 개선사업 총 335동 지속 추진 ('25년 완공 목표)

○ 군 시설물 적기 보수를 통한 시설물 장기 사용 및 시설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1년까지 적정 유지보수비의 100% 확보

- 연차별 적정 유지보수비 확보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적정유지보수비*	7,582	7,985	8,389	8,792	9,179
(전년대비 증가율)	(5.6%)	(5.3%)	(5.1%)	(4.8%)	(4.4%)
편성(목표)액	**3,387**	**4,098**	**7,179**	**8,211**	**9,179**
(전년대비 증가율)	8.9%	21.0%	75.2%	14.4%	11.8%
반 영 율	45%	51%	86%	93%	100%

* 적정유지보수비는 '15년 연구용역(군시설물 유지보수비 적정 투자방안 연구) 결과이며, '18년부터 증액을 통해 '21년까지 적정보수비 100% 확보 목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대내외 경기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에 직면하여 국가재정으로 경제살리기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 요구, 연례적인 국방예산의 이월·불용률을 낮추라는 국회 등의 지적

○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함께 낭비요소 제거 등 예산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요구 증대

○ 각 자원관리체계와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간 자산불일치의 완전한 해소는 구조적 한계가 상존함. 다만, 군수통합체계구축을 통한 자산일치율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

○ 경제성장률 둔화 속에서 일자리·저출산 문제 해결, 소득분배 개선 등 저성장 대응 및 복지정책에 우선순위를 둔 정부 정책 시행 전망에 따라 국방비 재원 확보 어려움 예상

* 경제성장률 : ('17) 3.2% → ('18) 2.7% → ('19) 2.0%
* 국가 재정여건(국가채무) : ('17) 660.2조 → ('18) 680.5조 → ('19) 731.5조
* 국방비 증가율 : ('17) 4.0% → ('18) 7.0% → ('19) 8.2% → ('20) 7.4%

○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기대 수준이 높으나, 안정적 예산 확보가 어렵고, 군수 인력 감축은 불가피한 상황

○ 장기간 소요되는 군 조달 절차로 인해 군수품이 민간의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며, 제한경쟁 및 동일업체 반복 조달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 지속

○ 낙후된 군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민간 중심으로 시행되던 내진보강·안전관리 등을 의무화하는 움직임 확대

《 대응 방안 》

○ 조기집행,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국방예산 집행점검단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부족사업에는 예산을 적시 조정하는 등 부진사업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예산 집행률 제고

○ 국방통합재정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추진 시 각 자원관리부대의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시스템개선을 통해 외부 환경요인 극복

○ △ 국방환경 및 국방분야 정책적 요구 분석을 통한 예산획득 논리 개발, △ 적정 국방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재정당국과의 공감대 구축, △ 국민과 국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추진

○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린 6시그마 등 경영기법의 군수분야 적용 노력 지속

○ 민간 혁신제품의 군 내 도입을 확대하고, 조달제도 개선 추진

○ 육군훈련소 및 해체·이전 예정부대의 생활관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관리 추진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사업 추진여건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예산 요구, 이월 · 불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는 관행 잔존

○ 각 자원관리체계와 국방통합재정정보체계간 대표계정과목 불일치로 연계오류 발생 상존 및 책임 한계 불분명

○ 예산 편성 및 중기계획 수립 시 사업별 우선순위, 재원 조정 기준 관련 부서·기관 간 이견 발생

○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국방혁신 추진에 따른 중첩 및 군수혁신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추동력 상실 및 혁신에 따른 위험부담으로 인해 과제 발굴 시 소극적

○ 군수품 조달 관련 군, 민간기업 뿐 아니라 조달청, 방사청, 중기부 등 다양한 정부기관이 연계됨에 따라 기관 간 입장 차로 인한 갈등 발생 우려

○ 해체 · 이전 예정인 노후 병영시설 사용에 대한 불만

《 대응 방안 》

○ 예산 편성시 결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문제사업을 사전에 식별하여 해결하고, 예산 집행점검 활동 강화 및 이월·불용 최소화 우수기관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 연계오류 최소화를 위한 자원관리부대별 회계전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표 계정과목 일치를 구현한 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간 갈등관계 해소

○ △ 각 군 및 사업부서에게 사업 설명을 위한 충분한 기회 제공,
△ 세밀한 검토·심의를 거쳐 적정 소요재원 규모에 대한 결론 도출 및 공감대 형성 후 재정당국·국회를 대상으로 설득 추진

○ 군수혁신위원회, 실무회의 등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여, 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동력을 확보

○ 주기적인 협의체 운영, 기관간약정에 기반한 협업 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품 조달 기반 조성

○ 해체·이전 예정부대 지원방안 수립·시행

(4) 기타 (참고자료)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 군 시설사업 집행지침

○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성과목표 Ⅳ-2	안보환경변화와 연계한 효과적인 국방인사정책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안보환경변화와 연계한 효과적인 국방인사정책**

추진방향	미래전장에 대비한 인사운영 추진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군무원 채용률 향상방안 추진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병 복무체계 개선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
핵심활동	• 우수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 • 연합·합동 전문인력 자원 확대 • 여군 역량 발휘를 위한 제도개선 • 모바일 앱 개발	• 여군 인력 확대 및 인사 관리제도 개선 • 여군 확대를 고려한 근무 환경 개선	• 군무원 채용률 향상방안 추진 • 군무원 위상 및 전문성 강화 추진	• 간부 정년 연장을 통한 복무활성화 유도 • 대체복무제도 개선 • 우수인력 획득 및 효율적인 군 인력운영 추진	• 직무분석을 통해 문민화 직위 식별 및 직제반영 추진 • 국방부본부 이외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장에 대한 문민화 추진

□ 미래전장에 대비한 인사운영 추진

○ 종합적 인사관리 개선요소(우수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 합동 및 연합·합동전문인력 자원 확대, 여군 역량 발휘 제도 보완)를 점검하여 실효적인 인사운영 기반 마련

○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한 청년장병 자기개발 지원 및 편의성 제공

□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 여군 인력의 단계별 확대 및 여군의 활용성·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사관리 제도 지속 발전

○ 남녀 모두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군무원 채용률 향상방안 추진

○ 경채시 필기시험 면제대상 확대(전문지식 및 경력자 유인방안 등), 수험생 부담 완화(합격자 결정범위 및 기간 확대 등), 국민 불편 요인인 시험장소 확대 등 개선으로 군무원 채용률 향상

○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 군무원 대우기준 개선, 사이버직렬 신설, 정책연구 등을 통해 군무원 위상 및 전문성 강화

□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병 복무체계 개선

○ 간부 운영 효율화 및 여군 인력 활용 강화를 통해 군 인력운영을 개선

○ 병역이행의 형평성 제고에 따라 대체역 시행 및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며, 병역자원 확보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추진

□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

○ 직무분석을 통해 문민화 직위 식별 및 직제반영을 추진하고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군사 전문성 강화

○ 국방부 본부 이외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장에 대한 문민화로 국방부 문민화의 실질적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미래전장에 대비한 인사운영 추진

○ 종합적 인사관리 개선요소 점검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 사이버 전문인력, 합동 및 연합·합동전문인력 획득/보직률 향상 이행수준 검토
- 반기별 여군 인사운영 평가회의 실시를 통한 제도 환류 마련

○ 모바일 앱 개발 및 활용·연계 방안 마련

- 모바일 휴가증, 철도예약, 신인성검사 등 연동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보완사항 후속조치 마련

□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 여군인력의 단계별 확대 및 양성평등한 인사관리 제도 마련

-「'18～'22 여군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획득경로별 여군 확대

* 여군간부(장교, 부사관) 비율 확대 : '20년 7.4%, '21년 8.1%, '22년 8.8%

○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육아여건 보장

- 군 어린이집(2개소 신설) 및 공동육아나눔터(7개소 신설) 확충

* 군 어린이집 확충계획(신설) : '20년 2개, '21년 8개, '22년 6개

□ 군무원 채용률 향상방안 추진

○ 신규증원 군무원 채용률 향상방안 마련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20년)을 통한 경채시 필기시험 면제 확대,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 채용률 향상 추진

○ 군무원 위상 및 전문성 강화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20년)을 통한 2급이상 군무원 임용권 조정, 대우기준 개선, 사이버직렬 신설 등 제도 개선 마련

□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병 복무체계 개선

○ 인력운영 개선 및 간부선발 확대

- 소령 정년연장 검토, 부사관 계급 다단계화(소수획득-장기활용), 단계별 여군확대 효과 분석을 통한 '23년 이후 확대계획 마련

○ 대체역 도입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

- 대체역 신설 관련 「병역법」 및 「대체역법」 하위법령을 제개정, 대체역 심사위원회 조직 및 심사 개시, 대체복무요원 소집 개시

○ 병역자원 확보 및 운영 활성화

- 병역자원 확보 대책 마련(병역판정률 정상화 및 상근예비역 축소 시행시기 검토)

- 유급지원병 제도 개선 추진(복무기간 연장 등)

□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

○ 군인이 보임하는 과장급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추가적 문민화 직위 식별 및 직제 반영 추진

○ 식별된 직위별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협의 및 「국방부와 소속 기관 직제」(행안부 주관) 반영 추진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사이버전략사령부, 합참 및 각 군의 상이한 인사관리 환경으로 개선된 제도의 획일적 적용 제한

○ 사회 전 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여성인력의 양적(수)·질적(상위계급) 확대에 따른 성별갈등 심화

○ 대외적으로 어려운 취업 환경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군무원 채용 확대에 우호적 분위기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 출생률 감소에 의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군 인력획득의 효율화와 인력운영 개선 필요성이 증대되어 우수인력의 안정적 획득 및 운영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된 '국방 문민화 적극 추진'은 국방부 문민화 실질적 추진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

《 대응 방안 》

○ 개선된 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으로 지속적인 환류과정 마련으로 제도 변화의 피로감 완화
○ 여성인력 확대가 양성평등한 선진 군 문화 조성과 남녀 모두 혜택을 누리는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강조,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의 공감대 형성
○ 군무원 채용 확대에 대한 우호적 환경을 활용하여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 인력획득 환경변화에 따라 군 인력운영 개선을 통해 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제고하고 간부 인력운영 효율화
○ 국방부 문민화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적극 활용하여 관계 부처 및 관계 집단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정책 성공률 증대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기존 전문인력과 보직, 진출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하여 갈등 발생 요소 존재

○ 여군 확대 목표제 시행 및 주요직위(정책부서, 지휘관 및 참모) 보직 확대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남군들의 역차별 문제 제기

○ 기존 군무원 수험생을 미고려한 일방적인 군무원 채용제도 개선 추진시 수험생들의 형평성 및 이해상충 발생 가능

* 경채시 필기시험 면제대상 확대, 사이버 직렬 신설 등

○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심사위원 임명 등 인사권 위촉에 대한 관계기관 간 이견과 갈등 소지가 예상

○ 국방부 문민화에 따른 군사전문성 저하 우려로 현역 및 전역 군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가능성

《 **대응 방안** 》

○ 기존 전문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포함한 지속적인 소통 방식을 택해 균형적 인사관리 관점 유지

○ 여성 대표성 확대는 다수 국민의 권익증진과 다양성의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직결되며, '더 좋은 군대, 더 강한 군대'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교육문화 측면의 다각적인 개선방안 모색·추진

○ 군무원 채용 제도 개선시 적정 시행시기 검토 등

○ 부처간 이해가 충돌하거나 의견 간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사전의견수렴 및 절차적 합의 과정을 통해 법령에 근거한 제도를 수립

○ 국방부 문민화를 우려하는 이해관계집단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로 적극적인 갈등 관리

(4) 기타 (참고자료)

□ 여군 비중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19. 12월)

○ 여군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계획('17. 9월)

○ '18～'22 여군인력 확대 추진계획('18. 1월)

○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2376호, '20. 1월)

○ '20～'22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 1월)

성과목표 Ⅳ-3	4차 산업혁명의 첨단 IC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국방 달성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전 첨단 ICT기반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능력 보장

추진방향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정보화 혁신	국방환경변화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정책 발전	스마트한 정보화 서비스 고도화
핵심활동	• ICT 신기술 국방적용 • 정책결정을 위한 국방아키텍처 활용	• 국방광대역통합망 서비스 지원 • AI・빅데이타 기술 수준 및 품질 향상 • 국방정보화표준 관리 기여	•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정보시스템 활용

□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정보화 혁신

○ 4차 산업혁명 첨단 ICT 기술 발전추세 및 국방환경 변화에 따라 규정, 기본정책, 조직 등 정보화 추진기반을 선진화하여 정보화 정책의 효과성 강화

○ 첨단 ICT 신기술 국방 적용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군사력 운용능력 지원을 위한 범부처 ICT 융합 R&D 협력 사업 및 국방실험사업 확대

○ 국방아키텍처*를 활용하여 국방정보화 현황을 가시화하고

아키텍처 데이터 기반 정보화 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국방정보화 추진

* 국방아키텍쳐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 데이터화·시각화를 통해 기본계획부터 정보화사업까지의 데이터 기반 추적체계 수립 및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정보화 종합 청사진

□ 국방환경변화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정책 발전

○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및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을 통한 초고속·대용량·초연결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

○ 국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확산을 통한 효율적인 정보자원 활용 및 공통 표준 서비스 제공

○ 국방 데이터 공유·품질 향상 생태계 조성과 빅데이터·AI 기술 업무 활용을 통해 경영 효율화 및 전력증강에 기여

○ 무기·전력지원체계 신규도입, 신기술 국방 활용 등 국방정보화 표준소요를 발굴하고 적기에 최신화하여 상호운용성 능력 향상

□ 스마트한 정보화서비스 고도화

○ IoT, Cloud, Bigdata, Mobile 등 IT 신기술과 소프트웨어의 상호 융합을 통해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 및 국방개혁을 지원

○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국방 자원을 가시화하고 국방 경영의 효율화 및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결과와 연계한 정보화 예산편성과 성능개선/재개발/폐기 등을 수행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보화 추진

(2) 세부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정보화 혁신

○ 「'20년 국방정보화시행계획」 수립 및 범부처 ICT 융합 R&D 협력사업 발굴·확산 (지속)

○ 국방실험사업 전담기관 지정・운영 및 우수 상용 IT신기술 시범 적용을 위한 국방 실험사업 추진 (매년)

○ 국방아키텍처를 성과에 기반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서 사용자 맞춤형 의사결정 지원정보 제공

□ 국방환경변화에 대비한 정보통신기술정책 발전

○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구축을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 및 민간투자사업 한도액 국회 승인 추진

○ 모바일 업무환경 구축·운용 정책 수립 및 상용망 기반의 차기 비화스마트폰, 재난망 단말기를 이용한 실증사업 추진

○ 국방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공통플랫폼* 및 국방 빅데이터·AI 플랫폼 구축

* 공통플랫폼 : AI·빅데이터·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된 하드웨어, 기본 프로그램, 개발도구 등의 필수적인 기술집합체. 사용자는 이를 해당 업무에 맞게 가공하고 활용하여 원하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음

○ 지능형 국방 경계감시시스템 기술개발('17~'21년, 과기부 협업)

○ 통합표준관리시스템 단계별 구축 및 체계 상호운용성 개선

□ 스마트한 정보화서비스 고도화

○ 유사·중복 정보시스템 통합 추진 및 빅데이터·AI 등 4차 산업 신기술 적용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각 군 잔류 주전산기 등 정보시스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로 이전·이관 추진 및 AI·빅데이터 기반환경 구축

○ 정보시스템 기능 활용 제고 위한 유지보수 조정·통제 및 국방통합데이터센터 24시간 무장애 운영 가동 관리 강화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안보환경) 미국 주도 下, 중국,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재해·재난, 테러, 사이버 위협 등 초국가적이고 비군사적인 신 안보위협 확대 등 초불확실성 증대

⇨ 선택과 집중의 국방정보화를 통해 국방경영을 민첩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초불확실성의 안보환경에 대처할 필요

○ (혁신기술) 사이버 및 우주공간으로 전장공간 확대, 자율로봇 및 군집드론 등 지능화·초연결의 신개념 무기 등장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전쟁 양상의 대변혁 전망

⇨ 4차 산업혁명 첨단 ICT 신기술 국방 적용, 지능형 스마트 부대 구축 등으로 초연결 스마트 군사력 운용능력 보장

○ (범정부 정보화 수준) 과기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 위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정책, 국가 AI 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과학기술/ICT혁신으로 지능정보사회 선도'를 목표로 창조경제 확산, 신산업 창출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

⇨ 범정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술의 활용과 이를 통한 국방 정보화 혁신 및 스마트한 군사력 건설 견인 필요

○ **(주요국 국방정보화 동향)** 미국, 영국, 호주 등은 국방정보화의 중점을 군별 기능별에서 전군적 통합 구축/운영으로 전환하였음. 기존 분리되어 있던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신망 등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강화

⇨ 정보화 투자에 대한 효율적 거버넌스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네트워크 중심 통합전력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으로 전환요청

○ **(주요국 국방아키텍처 활용 동향)** 한정된 국방정보화 예산으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의 4차 산업혁명 기반 국방정보화 혁신을 효과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효율화 요구 증대

《 대응방안 》

○ 국가 ICT 총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와 적극 협업을 통해 국방 ICT융합 R&D과제의 기술개발, 군 확산에 필요한 R&D 재원 및 기술의 안정적 확보

○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제 마련 및 기법 개발

○ 초연결·초융합·초지능 국방정보환경 구축을 위한 국방의 대응전략 수립과 신기술 조기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

○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대 잔류 주전산기 등 정보시스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로 이관・통합 효율화 추진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ICT를 포함한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민간의 기술수준이 높으나, 군의 요구에 적합한 기술획득과 국방 적용에 애로

○ 국방아키텍처는 다수의 산출물을 복합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됨

○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도입 정책 수립 시 보안부서, 사업부서, 활용부서 등 관련 부서 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상존

○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검증 미흡으로 정보체계의 성능개선/재개발시 보완·개선사항 적용 제한

《 대응방안 》

○ 과기부 협업을 통해 민·군 협력이 가능한 R&D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군에 적용 및 확산 가능토록 국방실험사업과 연계하는데 중점

○ 국방아키텍처 산출물 최적화, 업무 활용성 향상 방안 개발

○ 정보통신 신기술 정책 추진 시 유관부서 간 소통·협업 강화 추진

○ 기능활용율 및 사용자 만족도 등 자체 측정 및 제출자료에 대한 기관별 검증 강화

(4) 기타 (참고자료)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53호) 및 시행령(대통령령 25906호), 시행규칙(국방부령 제873호)

○ 국방정보화업무훈령(국방부훈령 제2398호)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839호)

○ ’19 ~ ’33 국방기본정책서

○ ’19 ~ ’33 국방정보화 기본계획

○ ’20년 국방정보화 시행계획

성과목표 Ⅳ-4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국방획득체계 개선 및 방위산업 육성 지원**

추진방향	국방획득체계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
핵심활동	• 정보화기반체계 구축 • 협력체계 구축 • 과제 이행 / 성과평가	• 국방과학기술 역량 강화 • 방산업체 지원정책을 통한 방산수출 기반 확대	• 전력소요검증을 통한 국방중기계획 지원 • 객관적·과학적인 시험평가 추진

□ 방위사업 업무체계 효율화 등 국방획득체계 개선 추진

○ 기관 내외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위한 정보화 기반체계 조성 및 방위사업 수행 전 기관/종사자의 전문성 등 강화를 통해 국방 이해 당사자간 협력적 관계 구축

○ 신속·효율성에 기초하여 소요, 획득, 운영유지가 가능하도록 국방획득체계 개선

□ 국방과학기술 역량강화 및 방산수출 기반 확대 추진

○ 국방 R&D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 발전 도모

○ 범정부 차원의 협력·지원을 통해 방산수출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방산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확대

□ 방위력개선사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민·관·군 합동 소요검증위원회를 통한 객관적·과학적 소요검증으로 중기계획 수립 시 합리적 재원배분에 기여

○ 무기체계 시험평가를 정확하고 적시성 있게 수행하여 획득과정의 각 의사결정 단계에서 의사결정권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

(2) 세부 추진계획

□ 방위사업 업무체계 효율화 등 국방획득체계 개선

○ 방위사업협의회 운용('19～'24년)

○ 국방획득정보시스템 구축 ('22년)

○ 국방획득 전문교육기관 설립 ('22년)

○ 신속·효율성에 기초한 국방획득체계 개선 관련 법령 및 제도 제·개정 ('23년)

□ 국방과학기술 역량강화 및 방산수출 기반 확대

○ 방위산업 발전 및 국방과학기술 관계 법령 정비 (～'21년)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등

○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4～'38) 발간 ('24년)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 명칭이 변경

□ 방위력개선사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전력소요검증위원회(분기별) 개최 및 후속조치 모니터링 (수시)

○ 무기체계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결과 판정의 정확한 수행 (수시)

○ 소요 검증과 시험평가 업무의 객관적·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수시)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국방획득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범정부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적인 우호적 여론 형성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필요

○ 주요업체 실적 악화 및 치열해진 글로벌 방산수출시장 경쟁으로 방산업계의 위기의식 확산 및 국방부-방산업체간 동반자로서의 의식 부족

○ 전력소요검증과 시험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외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 참여 지속 요구

《 대응방안 》

○ 국방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활동 강화 및 국방부-방산업체 소통강화 추진
○ 소요검증과 시험평가 추진간 민간 전문가 적극 참여를 통해 업무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 강화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방사청은 방산수출 진흥을 위해 각 군에 방산수출 관련 지원을 요청하나 각 군은 대비태세 유지가 우선이므로 방산수출 지원에 소극적 경향

○ 일부에서는 소요검증과 시험평가가 전력화지연의 원인이라는 불만/갈등

《 대응방안 》

○ 방산수출 지원 관련 방사청 차원의 해결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 국방부 주관 회의 등을 통해 문제해결 추진

○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절차적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4) 기타 (참고자료)

○ 방위사업법 (법률 제15051호, ’17.11.28)

○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96호, ’19.1.22)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935호, ’17.9.22)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국방부훈령 제2114호, ’17.12.29)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29호, ’20.2.4. 공포, ’21.2.5 시행)

○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법률 제17163호, ’20.3.31. 공포, ’21.4.1 시행)

성과목표 Ⅳ-5	군 공항 이전 및 효율적인 군사시설 운영 및 관리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 전 **군공항 이전 및 효율적인 군사시설 운영 및 관리**

추진방향	군 공항 이전	합리적인 군사시설 제도 운영 및 개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군사시설 관리
핵심활동	· 소통·갈등관리 중심의 후보지 선정 추진 · 사업지원 시스템 확충 및 업무역량 강화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 미군 주둔여건 보장을 위한 공여와 반환 추진	· 해강안 경계철책 및 낙석 제거 · 위탁개발 추진 및 환경 오염 조사 · 토양오염 반출정화 확대 및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상화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의 부지선정 절차 추진

□ 군사시설과 토지의 합리적 운영 및 처분

○ 해강안 경계철책 및 대전차 방어시설(낙석) 철거, 공공성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위탁개발 시행, 미활용 군용지 환경오염 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도모

□ 합리적 군사시설제도 운영 및 개선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군사시설제도 개선, 안정적인 미군 주둔여건 보장을 위한 공여와 반환 추진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합리적 제도운영 추진

□ 군 사용 재산의 합리적 관리·운영

○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를 발굴하여 정상화(매입, 교환, 유상임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부대 내 오염된 토양의 반출정화를 통해 부대 운영여건을 보장하여 안정적 군 주둔기반 마련

(2) 세부 추진계획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 대도시(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을 통해 공항 인근 주민의 소음피해 해소 및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이전 주변지역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

□ 군사시설과 토지의 합리적 운영 및 처분

○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추진 및 감시장비 설치, 대전차 방어시설 철거 및 대체 장애물 설치방안 도출

○ 노후 군관사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탁개발 시행, 세입대상 미활용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실시

□ 합리적 군사시설제도 운영 및 개선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군사시설제도 개선,

○ 안정적인 미군 주둔여건 보장을 위한 공여와 반환 추진

□ 군 사용 재산의 합리적 관리·운영

○ 군 무단점유 사·공유지 발굴 및 정상화(매입, 교환, 유상임차)를 통해 군의 합법적 토지사용과 국민의 재산권 보장

○ 부대 내 토양오염 발생 시 토양오염정화사업 대비 반출정화를 확대 시행하여 이용제한 면적을 최소화하고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부대활동 여건보장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남북한의 평화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접경지역 지자체의 개발의지와 부대 인근 주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어, 시설·부지의 처분 요청이 많음.

○ 접경지역 간담회, 리스크 상생회의 등을 통해 정책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로 인한 재산권 행사에 대한 규제를 바라보는 군과 외부(국회, 지자체 등)의 시각 차이가 상존하여 지속적인 규제 완화 촉구

○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요구가 늘어나고, 군 부대 내 토양오염 등 건강·환경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

《 대응 방안 》

○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의 부지선정 절차 추진
○ 대전차 방호벽 철거 및 토지 환경오염 조사 등 군사시설과 토지의 합리적 운영 및 처분 추진
○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민·군 상생 발전과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국방 정책 추진
○ 무단점유 사공유지의 정상화를 통한 국유재산의 합리적 관리 및 운영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군 공항은 다른 군사시설보다 기피시설로 인식되어 이전 대상지역 지자체·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지자체·주민들과의 소통 및 갈등 완화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

○ 재산권과 지역안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갈등이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간담회 등 실질적인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갈등 해결

○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조정 및 규제완화를 노력하였으나, 재산권 제한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지속되고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보호구역의 축소·조정을 빈번하게 요구

○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 군, 국직기관, 재정 당국 등 관련부서와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 군 부대 내 토양오염 등 부대 내 환경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

《 대응 방안 》

○ 지자체·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맞춤형 지원방안을 발굴, 언론 등을 통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갈등확산 예방

○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노력

○ 제도개선, 민원현장 방문 등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

○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토양오염 반출사업 확대를 통해 부대 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4) 기타 (참고자료)

□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839호, '17. 7. 26.)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1호, '18. 1. 16.)

□ 군사시설과 토지의 합리적 운영 및 처분

○ 국유재산법(법률 제14041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988호)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694호)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법률 제15046호)

○ 신재생에너지법(법률 제14670호)

□ 합리적 군사시설제도 운영 및 개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법률 제16352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893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1010호)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국방부훈령 제 24035호)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 4 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법률 제16498호)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법률 제16350호)

○ 건설기술진흥법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법률 제16272호)

○ 건축법 / 동시행령 / 동시행규칙 (법률 제15526호)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훈령 (국방부훈령 제1813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동시행령 (법률 제 16578호)

□ 군 사용 재산의 합리적 관리·운영

○ 국유재산법(법률 제16652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75호)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14호)

○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법률 제15046호)

○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233호, '18.12.20.)

○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제16613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972호)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833호)

○ 국방부 소관 군 환경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2307호 '19.8.8.)

전략목표 Ⅴ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內 포용문화 정착

기 본 방 향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국가 책임 이행 강화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군대 육성**

○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

○ 급식 조리여건 개선, 피복·장구류 품질 개선 등을 국민의 신뢰 제고

○ 환자중심의 군 의료기관 진료여건 향상을 통한 의료체계 개선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 등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및 수혜자 중심 군인연금사업 운영

◇ **인권 존중의 선진 병영문화 조성 및 생산적 군 복무여건 확대로 군 복무의 자긍심 고취 및 보람 있는 군 복무 유도**

○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지속적 인권교육 등을 통한 인권보호 강화

○ 군사법원·군검찰 분야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한 군 사법제도 개혁

○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인격과 생명존중의 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를 통해 전역 후 개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및 군 복무경험의 사회적 보상 확대 노력

○ 적극적인 국방정책 홍보 및 국민의견 수렴 등 양방향 소통 활성화로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도 제고

전략목표 5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內 포용문화 정착

(1) 주요 내용

□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국가책임 이행강화

○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및 복무여건 개선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 인상 및병 봉급 인상과 연계, 전역 시 목돈 마련 여건 보장

○ 장병 급식의 질 향상 및 피복·장구류 품질 개선

- 장병 급식비 인상 및 조리여건 개선
- 첨단 신소재 활용, 피복·장구류 품질 개선

○ 군 의료시스템 개편

- 장병들의 불필요한 군병원 대기시간 줄이고, 다빈도 질환에 진료 및 검사를 확대하는 등 환자 중심의 편의성 증대
-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 역량 강화

○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군 주거시설 소요기준’ 정립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
- 적극적 유지보수를 통해 군 주거시설 장기 사용 도모

○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맞춤형 전직지원 및 취업활동 지원

- 전역예정장병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전직지원 및 취업활동지원 기반 조성 및 홍보 추진

○ 수혜자 중심의 군인연금사업 운영

- 기금 자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및 적정 책임준비금 확보
- 군인연금 및 재해보상 제도 운영상 미비점 지속 발굴·개선

□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및 생산적 복무여건 확대**

○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지속)

-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적극 협력
  *「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안 정부입법 협조
- 사단급 군 인권 자문변호사제도 全 부대 운영

○ 군 특수성과 지휘권 확립을 유지하면서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 항소심을 민간에 이양하고 심판관과 관할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원 개선 추진

○ 군인복무기본정책을 근간으로 군 복무 적응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연구 및 외부기관과의 협업 강화

○ 軍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대학 원격강좌, 군복무경험) 기반 확대

- 軍 복무 중 학업의 연속성 보장을 고려 전공 및 교양과목 대상 원격강좌 수강을 통해 학점취득 보장을 위해 원격강좌 참여대학 확대
- 군복무경험의 사회적 인정확대와 복무 장병의 군복무가치 제고,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대

○ 장병 자기개발 학습기회 및 지원 확대

- 장병 자기개발 욕구 확대에 맞춘 실질적인 자기개발 여건 보장 및 다양한 학습콘텐츠 제공을 통해 자기주도형 자기개발 여건·기회 확대 지원

○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신뢰받는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 이미지 확립

- 튼튼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국방개혁의 성과를 지속 홍보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군의 모습을 통해 대국민 이미지 제고
- '디지털 퍼스트' 전략으로 변화하는 뉴 미디어 환경에 대응

(2) 성과지표

< 전략목표 성과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5	'16	'17	'18	'19	'24			
병영생활만족도	-	-	67.6	69.2	71.8	76.8	병영생활만족도 병영생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최근 3년 평균치는 69.5%임 '20년에는 72.8%을 목표로 하며, '24년 목표치는 '20년부터 매년 1%p 향상한 76.8%로 설정함	군 장병 4,000명 이상 무작위 설문조사, 층화다단계집락표본추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설문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만족도 조사

< 하위 성과목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8	'19	'20	'21	'22
Ⅴ-1. 봉급인상 만족도 (33%)	82점	80점	82점	83점	84점
주거지원 만족도 (34%)	66.5점	72.5점	70점	72점	74점
전직지원 만족도 (33%)	79.1점	79.7점	80점	81점	82점
Ⅴ-2. 병영생활 장병 사기 만족도	83.1점	84.1점	83.4점	84.0점	84.5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병 봉급 인상은 병사 사기 진작 및 국민적 요구에 대한 부응과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추진이 필요

○ 신세대 장병의 군 복무부적응, 군 기강해이, 자살 등 인명사고와 기본권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급증

○ 보건 및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의식 및 장병들의 군 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수준 증대 등으로 지속적인 군 의료체계 개선 요구

○ 전역예정 장병에 대한 사회 진출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대국민 신뢰 향상 도모 필요

《 대응방안 》

○ 병 봉급 인상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국회와의 협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환자중심의 진료여건 개선 및 군 병사 단체도험 도입 등을 통한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 의료체계 구축
○ 제대군인의 전직 교육서비스 강화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및 군 전문성 활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보
○ 친인권적 병영문화 조성을 위한 장병 인권교육 지속, 장병 인권보장제도 시행 강화, 대외기관 협력 및 군인권보호 제도 홍보 강화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피복·급식 관련 국방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진 국민, 국회 등에 대한 신뢰 형성이 필요

○ 군사법개혁안은 군 항소심 폐지에 대한 군내 반발, 조직 변경에 대한 각 군의 이해관계 등 갈등요인이 존재

○ 장병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지휘권 약화 및 기강해이 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음

《 대응방안 》

○ 품질 개선품 보급 및 홍보활동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 자율과 책임의 원칙 하에 무형의 전투력이 유지되는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장병 인권보호 강화 추진
○ 군사법개혁안 개정 추진간 군내, 관계부처, 대 국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회, 홍보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
○ 장병의 인권과 지휘권,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와 군 기강확립이 조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

성과목표 Ⅴ-1	장병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 및 국가책임 이행강화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전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

추진방향	장병 복무여건 개선	장병 의식주 개선	국방의료체계 개선	예비역 지원 강화
핵심활동	• 병 봉급 연차적 인상 • 병 봉급 인상과 연계, 전역시 목돈 마련 여건 보장	• 급식의 질 향상 • 피복·장구류 품질 개선 및 보급 확대 • 주거지원제도 개선·발전	• 환자중심 군 의료기관 진료여건 개선 • 군병원 체계 개편 • 군 의료기관 특성화 효율화	• '맞춤형' 전직지원 및 취업지원 • 수혜자 중심의 군인연금사업

□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 인상

○ 병 봉급 인상과 연계, 전역 시 목돈 마련 여건 보장(지속)

* '17년 최저임금(135만원) 기준으로 '22년까지 50%로 인상

□ 장병 급식향상으로 질적 개선 및 피복·장구류 품질개선

○ 장병 급식비 인상 및 조리여건 개선추진

○ 첨단 신소재 활용한 피복·장구류 품질개선 및 보급기준 개선

□ 군 의료시스템 개편

○ 장병 급식비 인상 및 조리여건 개선추진

○ 첨단 신소재 활용한 피복·장구류 품질개선 및 보급기준 개선

□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업군인에게 국격에 걸맞은 주거지원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 주거지원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 추진

- 직업군인 주거지원관련 조직·인력, 법령·규정, 정보체계 정비 등 **주거정책의 인프라 구축** 추진

□ 예비역 지원 강화

○ 전역장병을 위한 맞춤형 전직지원 및 취업활동 지원

○ 수혜자 중심의 군인연금사업 운영

(2) 세부 추진계획

□ 병 봉급 연차적 인상 등 복무여건 개선 및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50% 수준까지 병 봉급 인상

○ 병 봉급 인상과 연계, 전역 시 목돈 마련 여건 보장(지속)

※ 연도별 병 봉급 인상계획

구 분		'18	'19	'20	'21	'22
병 봉급 (원)	병장	405,700	405,700	540,900	540,900	676,115
	상병	366,200	366,200	488,200	488,200	610,382
	일병	331,300	331,300	441,700	441,700	552,161
	이병	306,100	306,100	408,200	408,200	510,216
봉급인상률		87.8%	0.0%	33.3%	33.3%	25.0%
최저임금 대비		30%	30%	40%	40%	50%

□ 급식 및 피복 질적 개선

○ 장병 급식비 인상 및 조리여건 개선 추진

- 사회급식 수준 및 장병선호도를 고려한 품목 다양화·고급화
- 민간조리원 확대 및 취사장 환경개선 등 조리여건 현대화 추진

○ 첨단 신소재 활용한 피복·장구류 품질개선 및 보급기준 개선

- 신형 전투조끼, 전투용배낭, 개인천막 등 : 조기전력화
- 전투복, 야전상의, 방탄헬멧, 수통, 방탄복 : 품질개선
- 기능성 런닝, 드로즈 팬티, 춘추운동복 : 보급수량 확대
- 컴뱃셔츠, 전투용 안경, 육군 챙 있는 전투모 : 신규보급
- 패딩형 동계점퍼 : 보급 확대

□ 군 의료시스템 개선

○ 장병들의 불필요한 군병원 대기시간을 줄이고, 다빈도 질환에 대한 진료 및 검사를 확대하는 등 환자중심으로 이용편의성 증대

○ 군 복무 중 질병·부상을 입은 병사의 진료선택권을 확대하여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 최대 활용 및 진료비 지원 확대

○ 골든타임 내 응급환자 처치 및 후송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군 응급 후송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과의 후송협력을 고도화

□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지원

- 초급간부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간부숙소 집중개선 추진
- 권역별 특성이 반영된 ‘군 주거시설 소요기준’ 정립
- 이사소요 최소화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민간주택시장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 직접건립방식 주거지원(관사 등) 지양, 민간주택임대 지원 확대
- 정부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군 주거지원 방안 마련

○ 주거시설 관리운영 전문성 제고

- 민간위탁 확대 등 관리운영 제도개선을 통해 만족도 향상
- 적극적 유지보수를 통해 군 주거시설 장기 사용 도모

○ 주거정책의 인프라 구축

- 군인복지기본법·군인복지기금법 개정 및 관련 규정 정비
- 주거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맞춤형 전직지원 및 취업활동 지원**

○ 단·중·장기복무자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 전역예정장병 대상 적합 일자리 개발 및 취업지원

○ 전직지원 및 취업활동지원 기반 조성 및 홍보 추진

□ 수혜자 중심의 군인연금사업 운영

○ 군인연금제도와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한 각각의 개별 법률이 제·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

○ 군인연금 및 재해보상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지속 발굴·개선

○ 기금자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 제고 및 적정 책임준비금 확보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병 봉급 인상은 병사 사기 진작, 국민적 요구와 애국페이 논란 해소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국가 재정여건을 고려한 추진 필요

○ 사회발전 추세에 따라 장병 생활여건(급식·피복)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요구 및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 군 급식비·급식여건은 사회단체 급식수준으로 개선 추진
- 노후·낙후된 전투물자와 지급수량도 품질개선을 통한 만족도 향상을 추진 중

○ 건강 및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 등 장병의 의료 권리의식 증대 및 병원 선택기준 변화

○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발전 과정에서 주거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 투입 시 관계부처와 갈등 및 부정적 여론 발생 가능

○ 청년층 '고용절벽'으로 청년 일자리 제공이 국정 최대현안으로 부각되면서 단기(의무) 복무장병에 대한 진로상담 등 사회 복귀 지원 강화 및 확대 필요

○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증시 하락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존재

《 대응 방안 》

○ 병 봉급 인상 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국회와의 협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비를 사회단체 수준까지 인상, 피복·장구류 품질개선 및 보급기준 확대
○ 열악한 주거여건을 감수하면서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직업군인의 현 실태를 설명하고 주거지원 발전에 대한 당위성 강조 및 공감대 형성
○ 예산 확보를 통한 단기복무자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군인연금의 안정적 자산 관리 필요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일자리지원 사업은 기관 간 정보 공유 필요

○ 군인연금 및 재해보상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가진 국민과 정책수혜자 등에 대한 신뢰 형성 필요

《 대응 방안 》

○ 사업수행 시 유관 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업
○ 전략적 홍보를 통해 공감대 형성 및 신뢰 제고

(4) 기타 (참고자료)

○ 군에 대한 신뢰/제제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 국방부 블로그 ‘동고동락’(mnd9090.tistory.com)

○ 국방부 SNS : 국방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국방 유튜브/ 플리커

○ 어머니 장병급식·피복 모니터링단 SNS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군인복지기본법(법률 제16033호, ’19.6.25.)

○ 군인복지기금법(법률 제16032호, ’19.6.25.)

○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국방부훈령 제2320호, ’19.9.19.)

○ 군인사법 제46조의2 (법률 제16928호, 2020.2.4.)

○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 (대통령령 제30384호, 2020.2.4.)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훈령 제2391호, 2020.1.29.)

○ 국방전직교육원법 (법률 제12746호, 2014.6.11.)

○ 군인연금법(법률 제16760호, ’19.12.10.)

○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19.12.10.)

성과목표 Ⅴ-2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및 생산적 복무여건 확대

(1) 주요 내용

《추진체계》

비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확립**

추진방향	인권 존중의 병영문화 조성	생산적 군 복무여건 확대
핵심활동	• 군 인권보호관 신설 추진 • 군 사법제도 개혁 •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병영문화 정착	• 장병 자기개발 지원 확대 • 군에 대한 신뢰 및 지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장병 인권보호 강화

○ 자율과 책임 원칙에 입각한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과 군 기강확립이 조화될 수 있는 장병 인권보호체계 확립

□ 군 사법제도 개혁

○ 군 특수성과 지휘권 확립을 유지하면서 군사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 항소심을 민간에 이양하고 심판관과 관할관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사법원 개선 추진

□ 생명 존중의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

○ 악성사고, 병영폭력 및 부조리가 척결되어 부모들이 자녀들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는 안전한 병영 조성

○ 장병 상호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병영문화 조성으로 국민 신뢰와 장병들의 복무만족도 향상

□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 軍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과 국가기술자격 취득기회 및 장병 자기개발 학습기회·지원을 확대하여 군 복무기간을 생산적 기간으로 조성

□ 군에 대한 신뢰/지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 변화하는 홍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신뢰받는 '디지털 강군', '스마트 강군' 이미지 확립

(2) 세부 추진계획

□ 장병 인권보호 강화

○ 장병 인권보호 기반체계 구축

- 군인권보호관 설치를 위한「국가인권위원회법」개정('20년)

○ 외부 인권관련 조사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 군인권보호관 운영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및 협업 구축('21년)

○ 인권교육 발전 및 내실화 추진

- 인권교육 기본교안 개발 ('20년)
- 인권교관 역량강화과정 및 심화과정 통합 운영 ('22년)
- 군 학교기관 훈육업무종사자 인권교육과정 확대 운영 ('23년)

○ 군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도입 및 신고·피해자 보호

- 신고의무 실효성 제고, 신고자 등 비밀보장 강화(지속)

□ 군 사법제도 개혁

○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20년~)

○ 군 사법개혁 법안 '군사법원법' 개정 ('21년)

- 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이관 및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
- 군사법원장 민간인 출신 임명
-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및 군 검찰 독립성 강화

○ 장병 참여재판제도 도입 검토 ('22년)

□ 생명 존중의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

○ 장병 적기 고충 조기식별 및 적기 해소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대 및 효율적 운영 추진
- '국방헬프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통창구 역할 강화
- 신인성검사 도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 그린캠프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심리치유 효과 증대

- 그린캠프 개선 용역연구 결과를 반영, 종합 발전계획 수립
  * 입소자 선정기준 구체화, 집단상담 및 표준 프로그램 개발 등
- 개선된 그린캠프 프로그램 적용, 시범운영 등 실효적 개선 추진

○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 척결 추진**

- 제대별 특성에 맞는「병영부조리 진단표」개선·시행

  * 신종 부조리 행태 식별·추가 등 실효성 증대를 위해 지속 보완 추진

- 상급부대 주관 현장확인 활동 등을 통해 성과 극대화

□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 軍 복무 중 대학 학점취득 기반 확대 추진

- 군복무경험 /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제 참여대학 확대

  * 교육부와 협업하여 수도권 대학 등 전국단위로 참여대학 확대

○ 국가기술자격 응시인원 확대 및 합격률 제고 추진

- 집체교육 및 학습콘텐츠 제공 등을 통해 복무간 우수인력 양성·활용 및 전역후 활용을 위한 자격취득 인원 확대 추진

○ 장병 자기개발 학습 참여기회 확대

- 군 복무 중 수강료의 50% 지원 등을 통한 여건 개선으로 원격강좌 수강 인원(참여율) 확대 추진
- 병 자기개발 비용지원 대상인원 확대 추진과 나랑사랑 포털內 다양한 무료 최신화 학습콘텐츠 제공으로 자기개발 여건 보장

□ 군에 대한 신뢰/지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국방개혁 2.0」의 성과를 중심으로 연중 지속 홍보 실시

- 2020년 부서별 주요 홍보콘텐츠에 대한 검토 및 지원계획 수립
- 디지털 · 스마트 강군의 모습을 통해 신뢰받는 국방 구현

○ 주요 정책, 계기별 전략적 홍보 실시

- ‘강한 국군, 튼튼한 국방’의 이미지를 담은 국군홍보영상 제작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군의 방역지원 노력 홍보
- 서울안보대화(SDD), 국군의 날 등 계기별 맞춤 홍보

○ 국민 참여, 공감형 홍보 활성화
- 국민소통전문가단 제5기 출범,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3~12월)

○ 온라인 및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동 강화
- 오보, 왜곡보도,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 대응 및 팩트체크 콘텐츠 제작
- 국민 및 장병 참여 유도로 디지털 소통 및 공감대 확산

(3) 외부환경 및 갈등요인 분석

□ 외부환경 분석 및 대응방안

○ 국내·외 지속적인 군 인권 개선 요구 증가
- UN 등 국제기구, 엠네스티 등 국제민간단체의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교육 강조 등 군 인권개선 요구 등 국민의식 수준에 상응하는 군 인권개선 권고가 지속되고 있음

○ 폐쇄성을 지적받아 온 군사법원을 국방부로 통합하는 등 군사법개혁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세계적으로 다수 국가가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군사법원이 민간으로 이양되는 추세

○ 병영문화 혁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 지속
- 병영내 반복되는 악성 사고, 구타·가혹행위, 군기강 해이 등으로 군복무 여건 및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혁신요구 증대

○ 군 복무중 학점인정 참여대학 확보 제한

-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의 구조조정 및 재정수입 감소, 여성단체의 가산점 부활로 인식 등 복잡한 이해관계로 학점인정 참여 대학 확보가 어려움.

- 군 복무인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검정응시 및 최종 자격취득까지 어려움이 내재함

《 대응방안 》

○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 조성과 군 기강확립이 조화될 수 있는 장병 인권교육 지속, 장병 인권제도 정비, 대외기관 협력

○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한 군사법개혁 추진으로 장병기본권 보장 강화

○ 군 복무중 학점인정 기회 확대를 위한 수도권 및 지방 거점대학 위주 우선 참여를 위해 교육부의 적극적 제도참여와 학교별 정책설명회 등 추진

○ 군 복무중 국가자격 취득인원 확대를 위해, 집체교육 및 학습콘텐츠 제공 등 적극 추진

□ 갈등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장병의 인권이 강조되면서 지휘권 약화 및 기강 해이 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음

○ 군사법개혁안은 군 항소심 폐지에 대한 군내 반발, 조직 변경에 대한 각 군의 이해관계 등 갈등요인이 존재

○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정책 추진간 수혜자의 반대 측면의 다양한 이해집단이 존재하여 상호 이견에 대해 조율・협조를 통해 성과있는 정책추진 방향 모색이 필요

《 대응방안 》

○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과 지휘권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대전제를 인식시킴으로써 장병의 인권과 지휘권, 인권 친화적인 병영문화와 군 기강확립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함

○ 군사법개혁법안 개정 추진간 군내,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대 국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회, 언론 홍보 추진을 통한 공감대 형성

○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조성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확충, 그린캠프 운영 및 군 언어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군 기강이 확립된 가운데 장병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군 복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추진

○ 군 복무중 대학 학점인정 관련 군 복무기회가 적은 계층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설명하고 학교별 현장 정책설명 등 추진

(4) 기타 (참고자료)

□ 장병 인권보호 강화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령

○ 군 인권업무 훈령

○ ’19 ~ ’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 군인권지키미(www.hrkeeper.mnd.go.kr)

□ 군 사법개혁

○ 군사법원법 (법률 제16926호, 2020.2.4.)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의2 (법률 제16584호, 2019.11.26.)

○ 군인사법 제57조 2항 (법률 제16928호, 2020.2.4.)

□ 생명 존중의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584호, 2019.11.26.)

○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273호, 2019.4.25.)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166호, 2018.5.29.)

□ 군 복무중 자기개발 기회·지원 확대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7.)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 #89-3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 및 지원 확대)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9조(권한의 위임 · 위탁)

□ 군에 대한 신뢰/지지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 인터넷 홈페이지(www.mnd.go.kr)

○ 국방부 SNS :

- 국방 유튜브(www.youtube.com/rokmnd2020)
- 국방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NDKOR)